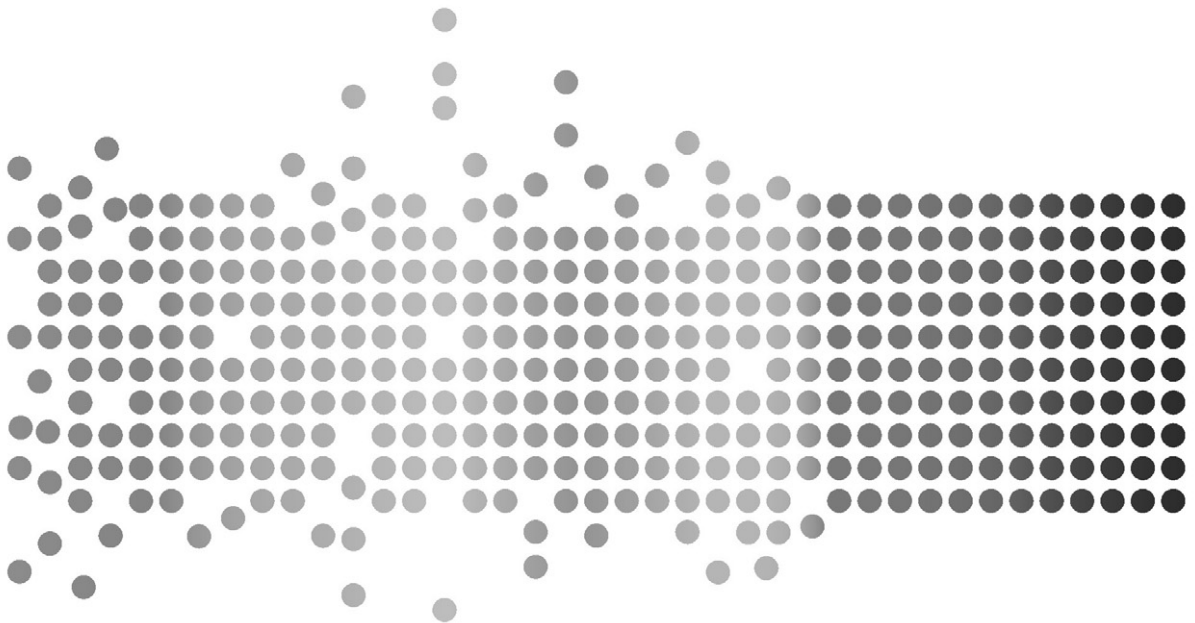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The Effect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on Inequality

김문길 · 김태완 · 박형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보고서 2012-35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발행일	2012년
저자	김문길 외
발행인	최병호
발행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주소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우: 122-705)
전화	대표전화: 02) 380-8000
홈페이지	http://www.kihasa.re.kr
등록	1994년 7월 1일 (제8-142호)
인쇄처	대명기획
가격	5,000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12

ISBN 978-89-8187-963-1 93330



머리말

오늘날 세계는 인구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주요 OECD 회원국들인 선진국들은 인구고령화와 이와 관련되는 가구규모 축소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정도는 아직 심각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가구구조를 필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를 추동하고 있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출산율 저하와 수명연장은 가구규모를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같은 인구고령화 또는 인구구조 변화는 우리나라에 사회경제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파급효과를 야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 중에서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에 대해서는 다수의 연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하게 규명되어 있지 못한 실정이다. 따라서 인구학적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포착해내는 것은 향후 소득분배 정책에 있어서 의미 있는 함의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다루고 있고, 가구구조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도 가구의 연령을 주요 변인으로 파악하거나, 가구구조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도 가구원 수를 주요변인으로 하는 등 가구구조의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해외 연구에서 채용되고 있는 몇 가지 방법론을 우리나라에 적용하여 인구학적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는 것은 의미 있는 작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김문길 부연구위원의 책임하에 본 원의 김태완 연구위원, 박형준 연구원의 참여로 진행되었다. 연구 진행에 있어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원내의 원종욱 연구위원과 남상호 연구위원, 그리고 국민연금연구원의 강성호 박사, 국회예산정책처의 김대철 박사, 그리고 대구대학교의 전승훈 교수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하는 내용들은 연구자 개인의 입장이며,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입장이 아님을 밝혀둔다.

2012년 12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

최 병 호

Abstract	1
요약	3
제1장 서론	17
제1절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의 구성	19
제2장 이론적 검토	23
제1절 소득불평등 확대 원인	23
제2절 소득불평등 파급효과	29
제3절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34
제4절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의 관계 선행연구	39
제3장 인구구조와 소득불평등 동향	53
제1절 인구구조 동향	53
제2절 소득불평등 동향	66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79
제1절 가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79
제2절 가구규모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88

제5장 결론 103

 제1절 결과 요약 103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 105

참고문헌 107

표 목차

〈표 3-1〉 지역별 인구구성비 비교(2011년)	55
〈표 3-2〉 60세 이상 세계인구의 지역별 분포	56
〈표 3-3〉 가구원수별 가구(2010~2035)	63
〈표 3-4〉 도시가구 유형별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추이	74
〈표 4-1〉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 변화 추이	82
〈표 4-2〉 연도별 빈곤과 불평등 정도의 추이	83
〈표 4-3〉 가중치조정에 의한 불평등지수 변화의 효과(변화율)	87
〈표 4-4〉 가구구성별 인구비중과 평균소득 변화: 1990-2011	93
〈표 4-5〉 인구하위집단별 불평등지수 변화	95
〈표 4-6〉 집단 내 - 집단 간 불평등지수의 분해	96
〈표 4-7〉 1990-2011년 인구집단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	99

그림 목차

[그림 2-1]	저소득분위 · 고소득분위 · 전체 근로소득(임금소득+사업소득) 비중 변화	26
[그림 2-2]	임금소득-사업소득 비중 변화	27
[그림 2-3]	근로자 가구-근로자외 가구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28
[그림 2-4]	'위대한 개츠비(Great Gatsby)' 곡선 : 세대간 소득탄력성과 소득분배의 관계	33
[그림 3-1]	총인구 대비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구성비, 2010-2060	59
[그림 3-2]	가정별 15-64세 인구, 1960-2060	60
[그림 3-3]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60	61
[그림 3-4]	국가별 총부양비 추이, 2010-2060	61
[그림 3-5]	가구 및 인구 증가(2010~2035)	62
[그림 3-6]	연령별 1인가구 추이 (2010~2035)	64
[그림 3-7]	가구유형별 2인가구 추이(2010~2035)	65
[그림 3-8]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추이	66
[그림 3-9]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규모변화 추이	68
[그림 3-10]	중위소득/평균소득 비율 변화추이	70
[그림 3-11]	분위수배율 변화추이(가처분소득 기준)	71
[그림 3-12]	도시가구 유형별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추이 (좌: 전년도 대비, 우: 1990년 대비)	75

An abstract graphic consisting of a central dark grey cloud-like shape with several smaller, lighter grey shapes scattered around it, resembling ink splatters or a molecular structure.

Abstract

The Effect of Population Structure Changes on Inequality

Two socio-economic changes have been prominent in Korea over the past 20 years. First, the household structure has changed. The average household size has declined dramatically, with the proportion of elderly households and of households with no children growing. Second, income inequality has been on a constant rise.

The aim of this report is to investigate whether the change of household structure has affected the change in income distribution. We attempted to quantify the effect of household changes on income inequality using re-weighting and decomposition. To assess the impact of the changing household structure between 1990 and 2011, we need to compare the counterfactual distribution of 2011 income and 1990 household structure with the actual 2011 income distribution. The Generalized Entrophy (GE) index can be decomposed as the sum of inequality within and between population subgroups. By the dynamic decomposition, we can

2 •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distinguish between inequality changes within and between population subgroups.

Our results show that the income inequality would have been lower if the household structure were kept unchanged. This means that the changes of household structure has influenced on the income distribution in Korea.

This results suggest that a more effective income distribution policy can be made integrating policies on income redistribution and other population issues.



요약

제1 장 서론

1. 연구의 목적

- 저출산과 빠른 인구고령화는 가구구성의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
 - 가구구성의 변화(가구원 수, 가구원 연령, 연령분포 등)는 균등화 과정을 통해 소득분배 상태를 변화시킬 것
 - 그러나 가구구성의 변화가 소득분배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
- 가중치 조정방법과 불평등지수의 동태적 요인분해를 통해 우리나라 가구구성 변화가 전체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함으로써
 - 소득재분배 정책과 인구가족 정책에 대한 정책함의를 도출해보고자 함.

2. 연구의 구성

- 다음과 같이 구성됨.

4 •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소득불평등 확대 원인과 파급효과,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제2장)
-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불평등의 동향(제3장)
- 가구구성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분석(제4장)
- 요약 및 정책시사점(제5장)

제2장 이론적 검토

1. 소득불평등 확대 원인

- 세계화, 기술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dualism) 등이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으로 꼽힘.
- 최근에 지목되고 있는 요인들
 - 생산성 높은 제조업 비중이 작아지고 생산성 낮은 서비스업 등 비중이 커지는 산업구조 변화
 - 인플레이션은 임금소득 의존도 높은 임금근로자와 자산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의 소득에 상반된 영향
 -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는 인구구조 변화
- 우리나라에서 설명가능한 요인들
 - 자산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 감소
 - － 자산소득에 비해 소득분배가 균등한 근로소득이 전체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감소할 경우 전체 소득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
 - － 마이크로 데이터를 통해 분석한 결과 소득하위집단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비중이 급감하면서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확대를 추동한 것으로 추론

- 근로소득 중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중 변화
 - 마이크로 데이터 분석 결과, 전체적으로 임금소득 비중이 증가하고 사업소득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
 - 하위소득계층을 중심으로 보다 균등한 임금소득 비중이 줄고, 보다 불균등한 사업소득 비중이 늘어남에 따라 전체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한 것으로 추론

2. 소득불평등의 파급효과

□ 정치경제학적 채널: 재정정책 접근

- 불평등 심화 → 경제성장 촉진 위한 세율 인상 → 재정지출 확대 위한 공적이전지출 확대 → 성장률 하락
 - 이 같은 채널은 일관적으로 실증되지는 않고 있음.
- 불평등 심화 → 빈곤층 정치참여율 하락 → 세율 인하 → 공동 투자 감소 → 성장률 하락

□ 사회갈등 채널

- 불평등 심화 → 정치, 사회적 불만 고조 → 사회 불안정성 유발 → 투자 위축 → 성장률 하락
- 도심과 부심간 소득격차가 전체 소득격차 유발
- 불평등 심화 → 사회적 자본 감소 → 성장률 하락

3.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 재정정책 채널과 연령구조

- 중위연령이 높아질수록 투표참여율이 높다는 점, 연령대별로 조세-재분배-공공지출 수요가 상이하다는 점에 근거

□ 사회갈등 채널과 연령구조

- 연령과 범죄참가율간의 역의 상관관계에 근거

제3장 인구구조와 소득불평등 동향

1. 인구구조 동향

□ 세계적 동향

- 연령분포 변화의 주요 원인은 수명연장, 사망위험의 감소, 출산율 감소로 지목되고 있음.
- 연령분포 변화의 역사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1단계는 (유아)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아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단계(rejuvenation)
 - 2단계는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아동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근로연령 성인비중이 증가하는 단계
 - 3단계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같이 하락하면서 아동, 근로연령 성인비중이 감소하고 노인비중이 증가하는 단계
- 3단계는 의료보장, 노후보장제도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는 단계이며, 이들 제도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세대간 형

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즉 공공정책에의 도전의 시기라 할 수 있음.

- 인구고령화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드러나지만, 향후 수 십년간 모든 국가들이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의 경험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향후 인구고령화 전개양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근로연령 인구 내에서의 고령화: 2050년까지 근로연령 인구의 1/3이 5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 고령인구 자체의 고령화: 80세 이상 인구 비중은 전세계 인구의 1.5% 미만이지만 향후 40년 동안 네 배가 될 것으로(2005년 9천만명 → 2050년 약 4억명) 전망됨.
 - 노년층에서의 성별 격차의 심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초현상이 심화

□ 우리나라의 동향

-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현재 545만명(11%)임. 통계청(2012)에 따르면 2030년에 1,269만명(24.3%), 2060년에는 1,762만명(40.1%)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됨.
- 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인구는 2030년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구 수는 1인 가구, 부부가구 등 가구분화 및 해체로 2035년까지 2,226만 1천 가구로 1.3배 증가할 전망이다.
 - 3인 이하 가구는 증가하고, 4인 이상 가구는 감소하여 가구규모의 축소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파악됨.

2. 소득불평등 동향

□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

-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990년 7.8%에서 2011년 15.0%로 증가했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7.1%에서 2011년 12.4%로 약 75% 상승하였음.
- 같은 기간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0년 0.266에서 2011년 0.313으로 증가했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0년 0.256에서 2011년 0.289로 증가하였음.

□ 소득계층별 규모 변화

- 빈곤층과 부유층이 동시에 확대되고 있으면, 이는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함.
- 중산층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1990년 75.4%에서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9년에 69.0%로 급감했다가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에는 66.3%까지 감소하였음. 이후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1990년에 비해 13.4%가 줄어들었음.

□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 비율 변화

- 우리나라의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 비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최저 0.893(2002년, 2008년)에서 최고 0.924(2003년)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시장소득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저 0.899(2002년)에서 최고 0.924(2003년)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면서 감소하는 추이를 보임.

□ 분위수배율 변화

-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수배율(p80/20)을 살펴보면, 1990년 2.07배에서 2011년에는 2.41배로 증가하였음.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의 2.40배 보다도 높은 수준임.

□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 변화

- 소득하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소득상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낮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증가율의 격차는 근로자가구를 제외한 비근로자가구에서 더욱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가중치 조정방법을 통한 가구구조 변화 효과

□ 방법론: 가중치 조정법(re-weighting approach)

- 두 시점간 실제 불평등지수의 변화가 가구구성이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불평등지수의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
- 1990년과 2011년 사이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 가구구조를 가정한 2011년의 반사실적 소득분포와 2011년 실제 소득분포를 비교

□ 분석자료와 기술통계

- 가계동향조사에서 2인 이상 도시가구를 추출, 1990년을 기준으로 2011년과 비교

10 •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가구규모 변화는 2인 가구 비중이 크게 증가, 3인 가구 약간 증가, 4인 가구 이상 감소
- 아동이 없는 가구가 두 배 가까이 증가, 노인 가구 크게 증가
-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중위 50%)과 지니계수, GE지수 모두 증가하는 추세

□ 분석결과

- 가구구조 변화가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변화의 55.6%를 설명, 부유율 변화의 33.3%, 지니계수 변화의 49.2%, GE(0) 변화의 31.8%를 각각 설명
- 가구구조 변화는 OECD 국가 전체적으로 지니계수 변화의 88.2%(OECD, 2008)를, 독일의 지니계수 변화의 12.8%(Peichl et al., 2010)를 각각 설명하는 것과 비교할 때 우리나라의 경우 OECD보다는 크지 않지만 독일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남.

2. 불평등 분해를 통한 가구구조 변화 효과

□ 방법론: 불평등 분해방법

- Mookherjee and Shorrocks(1982)의 동태적 요인분해를 통해 전체 불평등 변화를 인구하위집단 내 불평등 변화의 순효과(A), 인구구성 변화의 인구하위집단 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B), 인구구성 변화의 인구하위집단 간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C), 인구하위집단간 상대적 평균소득 변화의 효과(D)로 분해
 - 이들 중 인구구성 변화의 효과인 B와 C의 영향력을 파악

□ 기초통계량

- 성인 2인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 성인 3인 가구의 비중이 두 번째로 크게 증가해 이들 집단이 전체 가구의 약 45%를 차지
- 성인 3인 이상과 아동 1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가장 크게 감소, 성인 2인과 아동 1인으로 구성된 가구의 비중이 두 번째로 크게 감소

□ 가구유형별 변화

- 유형 5,6,9의 경우 인구비중이 감소하면서 불평등도가 증가
 - 소득분배 상태가 균등한 집단의 비중이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불평등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론
- 유형 4,8의 경우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불평등도가 감소
 - 소득분배 상태가 불균등한 집단의 비중이 증가면서 전체적인 불평등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추론
- 유형 12의 경우 인구비중이 증가했지만 불평등도가 감소
 - 소득분배 상태가 균등한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불평등도 증가를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추론

□ 정태적 분해결과

- 1990년 시장소득 불평등지수(GE(0)) 0.122 중 인구하위집단 내 불평등이 설명하는 부분이 95.9%
- 2011년 시장소득 불평등지수(GE(0)) 0.221 중 인구하위집단 내 불평등이 설명하는 부분이 96.7%
- 2011년 반사실적 소득분포 하 시장소득 불평등지수(GE(0)) 0.208 중 인구하위집단 내 불평등이 설명하는 부분이 97.5%

— 실제보다 인구하위집단 내 불평등의 영향력이 더욱 큼.

□ 동태적 분해결과

- 인구하위집단 구성비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를 확대하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친 가구유형은 성인 3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유형 8), 성인 2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유형 4)도 상당한 영향을 미침.
 - 이들 가구의 공통점은 첫째, 기준년도와 비교연도 모두 전체 불평등도에 비해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면서 불평등도가 더욱 증가한 유형들
 - 둘째, 전체 유형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유형들
 - 따라서 아동이 없는 성인으로만 구성된 2인, 3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소득불평등도 확대를 주동한 것으로 추론
- 성인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유형 12)와 성인 3인 이상과 아동 1인으로 구성된 가구(유형 9)이 경우 상대적인 비중의 변화가 전체적인 불평등도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
- 표준가구 유형으로 볼 수 있는 성인 2인과 아동 1인으로 구성된 가구(유형 5)와 성인 2인과 아동 2인으로 구성된 가구(유형 6)은 기준년도에 비해 불평등도가 증가했지만 구성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으로 불평등도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
 - 이들 가구의 경우 가구주가 근로연령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소득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 빈곤과 불평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으나, 그 비중이 감소하면서 이 같은 역할의 한계에 직면

제5장 결론 및 정책함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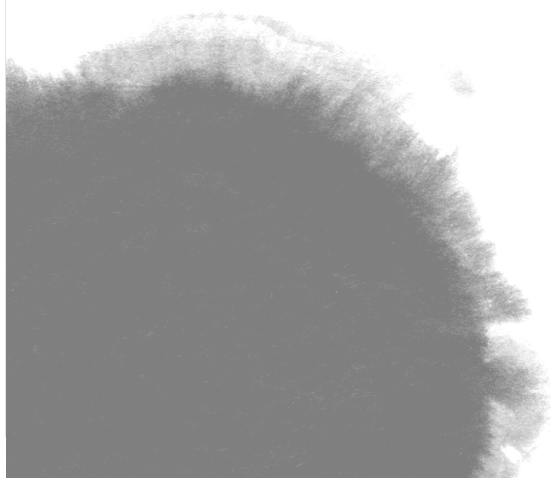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 조세·이전을 통한 사후적이고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은 인구 및 가족정책과 병행될 필요성이 있음.
 -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음.
- 첫째, 소득재분배 정책의 관점
 - 가구유형 내의 소득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을 거의 전적으로 설명한다는 점에서 구성비 변화가 크거나 현재 구성비가 큰 유형의 가구들에서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집중될 필요
 - 노인가구가 아동이 없는 가구를 주로 구성할 것이라는 추론 하에, 소득재분배 정책에 있어서 노인가구를 주요한 정책대상으로 삼을 필요성을 시사
 - 구체적 방안으로 노인의 기초보장제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부양 의무자 기준 완화, 재산의 소득환산제 개선 등 기초보장제도의 정비와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 해소 방향으로의 기초노령연금의 개편 작업을 들 수 있음.
- 둘째, 인구 및 가족정책의 관점
 - 소득불평등도 확대를 주동하는 가구유형에 대한 접근으로, 이른바 ‘분배지향적 가구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
 -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의 큰 영향력을 고려할 때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함을 시사
 - 향후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여타 사회정책 수립에 있어서 이른바 ‘저출산 인지적’ 관점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 연구의 한계

- 노인 1인 가구의 소득불평등 확대에 대한 영향력이 클 것이라는 추론을 따른다면 분석에 1인 가구가 포함되어야 할 것이나 자료의 한계로 이를 반영하지 못했음.
- 가중치 조정방법에 있어서 가구주의 학력, 성, 연령 등 여타 인구사회학적 특성들을 통제하지 못한 것도 분석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음.

1장

서론



제1장 서론

제1 절 연구의 목적

오늘날 세계는 인구구조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특히, 주요 OECD 회원국들인 선진국들은 인구고령화와 이와 관련되는 가구규모 축소라는 인구구조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에 비해 우리나라의 인구고령화 정도는 아직 심각하지는 않지만, 상당한 속도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에서 경제활동이 가장 왕성한 인구인 핵심생산인구(25세~49세)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고,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하면서 2017년경부터는 생산가능인구(15세~64세)가 감소하기 시작하여 2016년 3,704만명에서 2060년 2,187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이 시기부터 노인 인구 비율이 14%가 넘는 ‘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11). 또한 우리나라는 OECD 국가에서 3번째로 젊은 인구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2050년에는 두 번째로 고령화한 인구구조를 갖게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도 하다(OECD, 2012).

인구고령화의 진전은 가구구조를 필연적으로 변화시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인구고령화를 추동하고 있는 양대 축이라 할 수 있는 출산을 저하와 수명연장은 가구규모를 축소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수명연장은 노인부부가구와 노인단독가구의 비중을 늘리고, 출산을 저하는 자녀수를 감소시켜 전체적인 가구규모를 축소시키는 원인이 된다. 통계청 장래가구추계에 따르면 2인 가구 이하의 비중은 2000년 34.6%에서 2010년에는 43.4%로 늘어나고 2030년에는 51.8%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그리고 같은 자료에서 자녀가 있는 가구(부부+자녀, 부+자녀, 모+자녀)의 비중은 2000년 55.9%이던 것이 2030년에는 41.9%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와 같은 가구규모의 축소와 가구구성의 변화는 소득분배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것은 통상 빈곤의 정도나 소득분배의 상태를 파악하는데 기준이 되는 후생을 측정하는데 있어서 균등화(equivalence weighting)의 개념을 사용하는 것과 관련이 된다. 후생을 소득으로 측정하게 될 경우 가구원 수나 가구원의 연령을 고려하기 위해 소득에 균등화지수를 적용한 균등화소득을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이 같은 균등화소득을 적용하게 되면,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구원 수나 가구원의 연령이 변동할 경우 전체적인 소득분배상태가 변하게 된다.

그러나 소득분배를 어떤 방향으로 변화시킬 것인지에 대해서는 불명확하다. 이것은 가구규모 축소가 두 가지 상반되는 효과를 발생시키기 때문이다. 출산을 하락에 의한 무자녀 부부가구의 증가는 균등가중소득을 높여 소득분배를 개선시키는 효과가 있는 반면, 1인 가구의 증가는 균등가중소득을 낮추어 소득분배를 악화시키는 효과를 유발한다. 후자는 소득 중에서 고정비용을 공유할 수 없는데 따르는 효과이다. 결국 가구규모의 축소는 소득분배에 두 가지 상반된 효과를 야기하게 되고, 그 순효과는 이 두 가지 인구집단의 상대적 소득의 크기에 따라 결정이 될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대부분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다루고 있고, 가구구조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도 가구주의 연령을 주요 변인으로 파악하거나(김진

욱, 정의철, 2010), 가구구조의 변화를 다루는 연구도 가구원 수를 주요 변인으로 하는 등(김용성, 2005) 가구구조의 변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심이 소홀했다 할 수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착안해서 가중치 조정방법(re-weighting approach)(Di Nardo, Fortin, and Lemieux, 1996)과 불평등지수 분해방법(Oaxaca, 1973; Blinder, 1973)을 이용해서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해보고, 그 결과로부터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해보고자 한다.

제2절 연구의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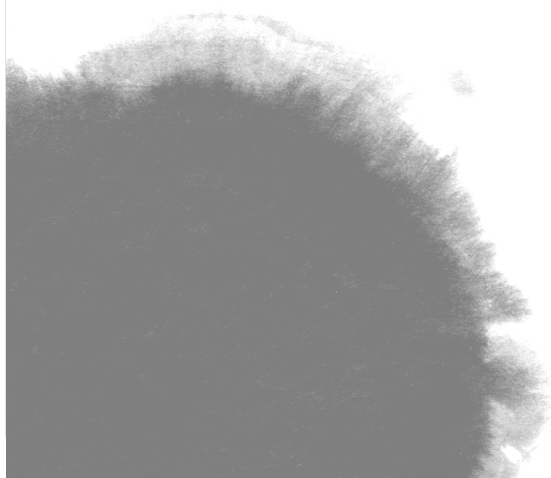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위와 같은 연구의 목적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성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제2장에서는 소득불평등 확대의 원인과 그 파급효과,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에 대한 이론적 검토와 함께 관련 선행연구를 정리하였다. 제3장에서는 세계적인 인구구조 변화의 경향과 전망에 대해 UN의 보고서를 인용하여 소개하고, 우리나라의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불평등의 동향을 정리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가중치 조정방법을 이용한 연령분포의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불평등 분해방법을 이용한 가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각각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였다. 제5장에서는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고, 정책적인 함의를 살펴본다.

-
- 1) 인구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한 연구로 국내에는 여유진 외(2005); 임병인·전승훈(2005); 원종학·성명재(2007); 성명재·박기백(2009) 등이 있고, 해외 연구로 Bishop, Formby, and Smith(1997), Ohtake and Saito(1998), Barrett, Crossley, and Worswick(2000), Cameron(2000), Zhong(2011) 등이 있다.
 - 2) 가구규모나 가구구성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해외 연구로 OECD(2008), Peichl et al.(2010) 등이 있다.

2장

이론적 검토



제2장 이론적 검토

제1 절 소득불평등 확대 원인³⁾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가장 정형화한 요인으로 꼽히는 것은 세계화, 기술변화, 노동시장 이중구조(labor market dualism)의 심화이다. 세계화의 진전 정도와 소득불평등의 정도는 많은 국가들에서 확실히 같은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확인되고는 있지만 세계화가 소득불평등의 원인이라고 단언할 만큼 확실하게 실증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보인다. 기술변화는 숙련노동 편향적인 기술변화가 불평등의 원인이 된다는 것인데, 전통적인 노동집약적 제조업이 쇠퇴하고 고도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이 발전하면서 고학력 및 고숙련 중심으로 산업구조가 재편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숙련노동의 수요가 높아지는 반면, 다수의 저학력 및 저숙련노동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면서 이들 사이의 소득불평등이 심화된다는 논리이다. 노동시장 이중구조는 정규직과 비정규직간 임금격차, 임금근로자와 비임금근로자간 소득격차, 그리고 내국인과 저숙련 및 저임금 이주노동자의 임금격차로 그 패턴을 구분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것들을 짚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제조업 비중이 감소하는 산업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제조업

3) 이 부분은 김문길(2012)의 내용 중 일부를 재정리 한 것임을 밝혀둔다.

비중의 감소가 불평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 산업부문 중 생산성이 높은 제조업의 비중이 작아지고, 생산성이 낮은 서비스업을 비롯한 여타 산업의 비중이 커질수록 중산층이 축소된다는 논리이다. 제조업은 다른 산업에 비해 인적자본 축적이 잘 이루어지고, 연구개발 투자가 집중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제조업 종사자들의 다수가 중산층에 속해 있기 때문에 제조업의 후퇴는 중산층의 축소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Rodrik, 2006).

또한 인플레이션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임금소득 의존도가 높은 임금근로자와 자산소득 비중이 높은 부유층에게 인플레이션은 상이한 영향을 미친다. 즉, 인플레이션이 높을 경우 임금근로자의 실질임금이 명목GDP에 완전히 연동되지 못해 실질소득의 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반면, 실물자산 보유비중이 높은 부유층은 실물자산이 인플레이션에 민감하게 조정됨에 따라 이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강종구 외, 2012). 이와 관련해서 근로소득과 자산소득간의 소득분배 차이 또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주요 국가들의 경우 소득으로 측정한 지니계수가 0.2에서 0.4 사이에 분포하는 반면, 자산으로 측정한 지니계수는 0.6과 0.9 사이에 분포한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해준다(통계청 외, 2012; 강종구 외, 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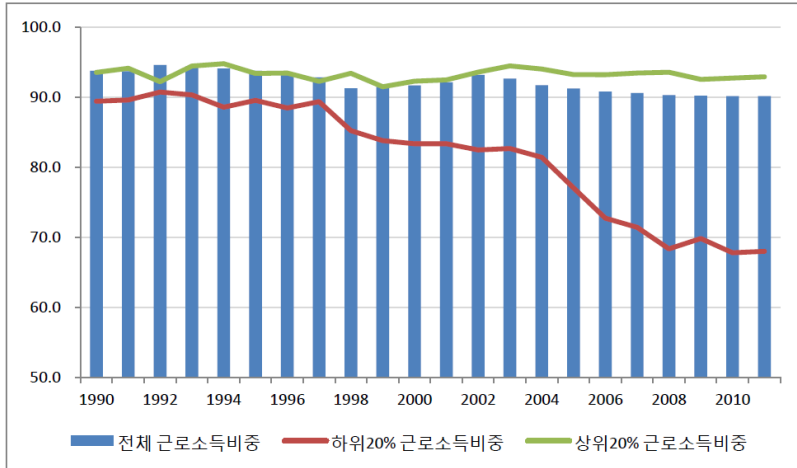
다음으로 인구구조 변화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이 실증되고 있다(성명재·박기백, 2009). 한편, OECD는 2008년 보고서에서 인구구조 변화 자체보다는 이로 인한 가구구조변화, 즉 1인 가구 증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OECD, 2008). 우리나라도 최근 인구학적, 사회경제적 영향으로 가구규모가 줄어들고 있어 OECD가 보고하는 불평등 심화 메커니즘에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의 비중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것인데,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

면 2005년의 최빈 가구원 수는 4인이었으나, 2010년에는 2인으로 바뀌었다. 1,2인 가구 비중이 42.2%에서 48.2%로 6%p 증가한 반면, 4인 가구는 27.0%에서 22.5%로 4.5%p 감소했고, 5인 이상 가구는 10.0%에서 8.1%로 1.9%p 감소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금까지 언급한 대부분의 영향에 대체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간단한 기술통계를 이용해서 자산소득 대비 근로소득 비중 감소, 근로소득 중에서 사업소득 대비 임금소득 비중 감소 등을 규명해볼 수 있다.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은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첫째, 근로소득 비중 감소는 자산소득에 비해 소득분배가 보다 균등한 근로소득(임금소득+사업소득)이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에 따라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수준이 달라질 수 있다는 가설에 근거한다.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경상소득에서 근로소득(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을 살펴보면, 1990년 93.8%에서 조금씩 하락하여 2011년에는 90.2%로 3.6%p 하락하였다. 소득분위로 나누어 살펴보면, 먼저 소득상위 20%의 근로소득 비중은 1990년 93.6%에서 2011년 92.9%로 0.7%p 하락했지만, 전체적인 추세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인다. 반면, 소득하위 20%의 근로소득 비중은 1990년 89.4%에서 2011년에는 68.0% 크게 감소하였다(21.4%p). 그림에서 보듯이 전체 도시가구와 상위 20% 소득계층에 비해 하락세가 뚜렷하다. 특히 IMF 경제위기 이후 그 하락세가 더욱 두드러진 것을 알 수 있다. 자산소득에 비해 소득분배가 보다 균등한 근로소득 비중이 소득하위집단에서 급감하면서 전체적인 소득불평등 확대를 추동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김문길, 2012).

[그림 2-1] 저소득분위 · 고소득분위 · 전체 근로소득(임금소득+사업소득)
비중 변화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김문길(2012)에서 재인용

두 번째로, 근로소득 중에서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중의 변화를 들 수 있다. 경상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중은 1990년대 후반까지 하락하다 2000년대 초반부터 상승한 후, 2000년대 후반에 들어 다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반면, 사업소득 비중은 전체적으로 근로소득 비중과 반대의 추이를 보이면서 전체적으로는 하락했다.

이를 소득분위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먼저 소득상위 20%의 임금소득 비중은 전체가구보다 높은 수준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이는 반면에⁴⁾ 소득하위 20%의 경우는 전체적으로 하락하는 추세가 뚜렷하다.⁵⁾ 그러나 사업소득의 비중은 두 소득계층 모두 하락하고 있으며, 하락세는 소득상위 20%에서 보다 뚜렷하게 관찰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전체적으로 임금소득의 비중이 증가하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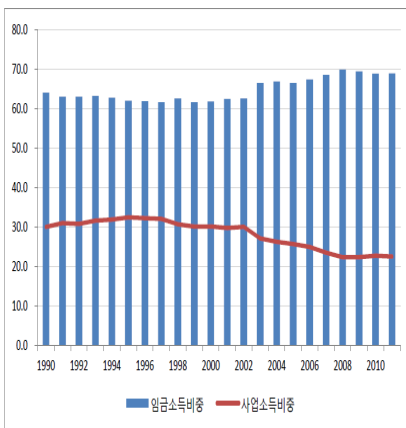
4) 1990년 60.4%, 2011년 72.3%로 11.9%p 상승

5) 1990년 62.3%, 2011년 48.4%로 13.9%p 하락

사업소득의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하위 20%의 경우는 임금소득 비중이 크게 하락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면서 소득하위계층의 사업소득 비중이 상대적으로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노동시장에서 이탈하여 자영업업을 선택한 소득하위계층이 많아지고 있는 경향성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소득하위계층을 중심으로 소득분배가 보다 균등한 임금소득 비중이 줄어들고, 소득분배가 불균등한 사업소득의 상대적 비중이 커지면서 전체적인 불평등 심화에 기여를 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림 2-2〕 임금소득-사업소득 비중 변화

〈전체〉



〈소득계층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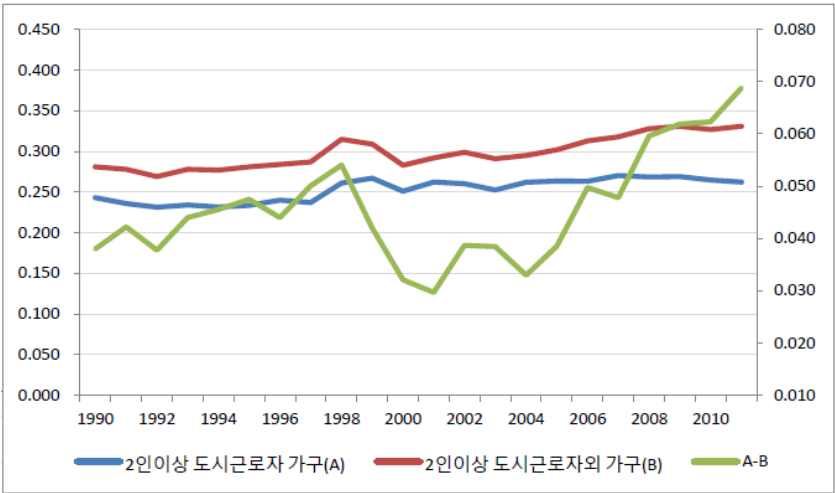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김문길(2012)에서 재인용

임금소득과 사업소득의 소득분포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에서 (임금)근로자 가구와 근로자외 가구를 구분해서 각각의 지니계수를 구해보면 아래 그림과 같은 추이를 보인다. 지니계수의 크기는 근로자가구보다 근로자외 가구에서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나 임금소득에 비해 사업소득의 소득분배가 보다 불균등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가구유형의 지니계수의 차이는 연도별로 등락은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3] 근로자 가구·근로자외 가구의 지니계수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김문길(2012)에서 재인용

제2절 소득불평등 파급효과

1. 정치경제학적 채널: 재정정책접근

소득불평등의 파급효과에 대한 정치경제학적 채널에 의한 설명은 Persson and Tabellini(1994), Alesina and Rodrik(1994)에 의해 발전되었다. 두 연구 모두 공공선택이론의 논리에 근거한다. 이 모형은 투표자의 선호가 정부의 재정정책에 영향을 미친다는 가정을 근거로 한다. 불평등이 심화하면 경제성장을 촉진하기 위한 세율이 인상되고,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를 위한 공적이전지출이 확대됨에 따라 경제성장률이 하락한다는 관점이다. 그러나 이는 중위투표 모형에 입각한 예측이 현실과 상충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 실제 OECD 국가의 세전불평등은 사회이전과 GDP에서의 조세비중에 유의한 음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분석된 연구결과가 있고(Rodriguez 1998; Gomez and Meltz 2001), 공적이전의 성장효과가 대부분 연구에서 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실증되고 있기 때문이다(Benabou 2000).

다음으로, 조세 - 공공지출 - 성장(Participation channel)간의 관계에 대한 설명도 이와 같은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 불평등이 심화할수록 세율이 감소한다는 채널은 소득증가에 따른 정치활동의 증가라는 투표성향의 결과와 관련이 있다(Rosenstone and Hansen, 1993; Benabou, 2000). 평등한 소득분배 경제일수록 높은 투표참여율을 유발하기 때문에 이 같은 연유로 많은 국가에서 ‘최적과세하한선(optimal tax threshold)’ 이하에 머물고 있다. 최적과세하한선의 개념은 부자는 사적재로 공공재를 대체하고, 빈자는 다양한 정부지출에 의존한다는 관념(notion)에 기초한다. 따라서 공공지출은 균등화(equalizing)와 성과를 추동하는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며(Ferreira, 1995), 결국 불평등은 재정

정책에 의해 낮은 성장을 유발하며, 이는 결국 “불평등 → (i)가난한 사람들의 정치참여↓ → (ii)조세↓ → (iii)공공투자↓”의 채널을 통해서 드러난다는 것이다.

2. 사회갈등(social conflict) 채널

사회갈등 채널은 크게 세 가지의 관점으로 설명된다. 첫 번째는 불평등이 심화하면 정치적·사회적 불만(discontent)이 높아지고 이는 사회 정치적 불안정성을 유발하여 투자가 위축되고 따라서 성장이 지체된다는 관점이다⁶⁾(Alesina and Perotti, 1993; 1996)

두 번째는 도심(urban)과 부심(suburban)간 소득격차가 전체 도시(metropolitan)의 생산과 임금을 하락시킬 수 있다는 관점이다. 소득불평등이 심한 도시에서는 가장 부유한 지역이라 하더라도 평균가구소득은 낮아질 수 있다는 것인데, 이는 도시의 불평등이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것으로 개발도상국뿐만 아니라 선진국에서도 설명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에서 뒷받침 된다(Benabou, 1996).

세 번째는 사회적 자본(social capital)과 관련되는데, 소득불평등은 폭력범죄뿐만 아니라 1인당 사회참여율 하락, 사회적 신뢰 결여와 같은 사회적 자본과 강한 상관관계를 가진다는 것이다. 동질적인 사회에서의 진보적 정책에 따른 사회안정이 광범위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를 수 있다(Rodrik, 1998; Bruno and Easterly, 1998).

6) 사회학적 용어로 상대적 박탈이론(relative deprivation theory). 미국 소득불평등에 따라 도시 폭력범죄증가(Balu and Balu, 1982)

3. 대리인 비용(agency cost) 모형

대리인 비용 모형과 성장간의 이론적 관계를 규명하는 것인데(Furman and Stiglitz, 1998; Greenwald and Stiglitz, 1986a), 소득과 재산의 불평등이 심한 상황에서 주인(principal)이 자신의 자산을 대리인(agent)에게 이용토록 위임할 경우, 불완전 정보하에서 거래가 성립됨에 따라 대리인 비용을 유발하게 되고, 결국 경제성장이 정체된다는 관점이다. 대리인의 모든 행동들이 가까이에서 설명될 수 있는 완전한 계약(perfect contract)을 달성하는 데는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며, 완전한 계약하에서도 이를 감시하고 강제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대리인 비용과 모니터링에 따른 절차가 결국 산출량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불평등이 대리인 비용을 유발시킨다면 경제성장과도 악화될 것이라는 관점이다. 이에 대해 선진국에서 저임금과 높은 모니터링 비용이 체계적으로 관련되어(systematically related) 있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뒷받침되고 있다(Gordon, 1996).

4. 자본시장 불완전성과 인적자본 확산 모형

생산적 기회(productive opportunity)와 부의 분배와 관련되는 설명이다. 부의 분배에 따라 생산적 기회가 상이해지는데, 이는 빈자의 경우 유사한 능력과 노력함수를 가지고 있어도 자신들의 가장 생산적인 활동에 투자를 하기 어렵다. 교육은 고숙련/저소득자의 빈곤탈출의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인적자본은 균등하게 배분되지 않는다. 즉, 빈자는 신용제약에 따라서 인적자본 투자를 위한 최소고정비용(교육비 혹은 임금의 기회비용)을 조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같은 신용제약이 야기하는 비효율을 줄이기 위해서는 완전한 자본시장이 전제되어야 하지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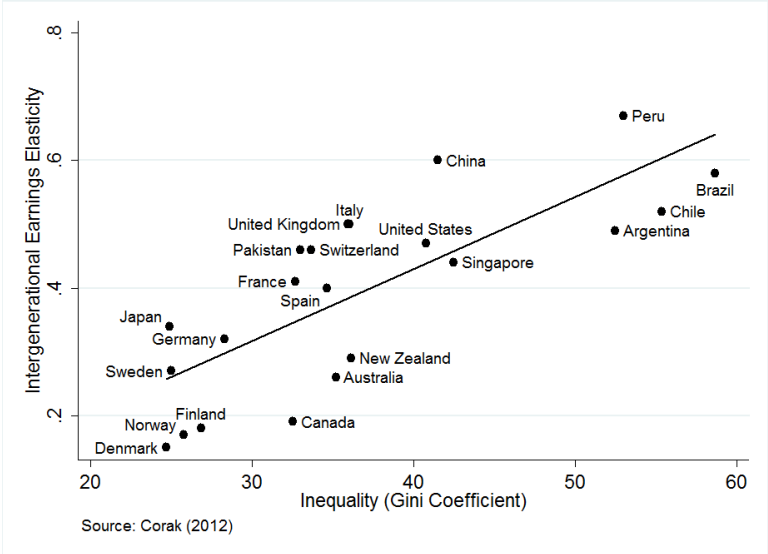
현실에서 자본시장은 완전하지 않다. 따라서 금융시장이 불완전한 경우, 즉 빈자의 차입이 어렵거나 불가능한 경우 많은 부존자산을 보유한 사람은 인적자본에 많은 투자를 하게 되고, 빈자는 인적자본에 투자를 하기 어려워지게 된다. 빈자의 비중이 커지게 되면 재산과 소득의 불평등한 분배는 인적자본에 대한 총투자를 감소시켜, 결국 경제성장에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Galor & Zeira, 1993).

이 같은 채널은 개인의 능력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개인생산성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것은 생산성의 차이가 환경의 차이에서 기인한다는 논의로 확장될 수 있다. 분배상황이 평등할수록 사회전체의 인적자본 수준이 높아진다.

5. 소득이동성

불평등도가 높은 국가들은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이 낮을 수 있다. 세후소득불평등의 OECD 데이터를 이용(지니계수)하여 이를 scatter diagram으로 그려보면 세대간 소득이동성과 지니계수의 관계를 구할 수 있다(Corak, 2012). 아래 그림에서 X축의 높은 점에 위치할수록 대략 아동이 성장하는 시기의 소득불평등이 크다는 것이고 Y축의 높은 점에 위치할수록 세대간 경제적 이동성의 정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불평등도와 소득이동성의 관계는 우상향하는 직선으로 나타난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가구간 불평등이 심할수록 한 세대에서 다음세대로 소득이 지속됨을 의미하는데, 미국 대통령경제자문회의 의장인 앨런 크루거 교수는 이를 "위대한 개츠비 곡선"이라 명명하고 있다(Krueger, 2012). 이는 아동발달 과정과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의 역할의 결과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아래 그림과 같이 국가들마다 상이한 효과를 보이고 있다.

[그림 2-4] ‘위대한 개츠비(Great Gatsby)’ 곡선: 세대간 소득탄력성과 소득분배의 관계



제3절 인구구조 변화의 파급효과

1. 불평등 - 경제성장 채널

앞서 소득불평등의 경제성장에 대한 파급효과를 다양한 채널별 효과로 구분해서 살펴보았다. 이하에서는 각각의 채널에서 연령구조가 고려될 경우 어떤 변화가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이하의 내용은 Gomez & Foot(2003)을 발췌한 것이다.

가. 재정정책 채널과 연령구조

(1) 인구와 재정정책의 관계

인구와 재정정책의 관계에 따르면, 장년층(matured-aged voter) 비중이 클수록 투표율과 정치참여율이 높아진다는 것과 연령계층별로 조세 - 재분배 - 공공지출 수요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다는 것에 근거한다. 장년층 비중과 투표율의 관계는 40-59세의 비중이 23% 정도일 때 투표연령 인구(VAP)의 투표참여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실증되고 있으며, 연령계층별로 조세, 재분배, 공공지출 수요에 대한 태도가 상이하다는 것은 캐나다의 경우 젊은 층(18-24세)과 노년층(65세 이상)이 정부재정적자감소보다 공적이전 확대를 선호하는 반면, 나머지 연령대는 반대의 경향을 보인다는 연구결과가 뒷받침하고 있다.

(2) 사회갈등 채널과 연령구조

사적, 사회적 불화는 임금, 실업가능성의 변화에 대응한다. 연령과 범

죄 참가율은 역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임금과 고용률은 생애주기에 걸쳐 급속히 증가하는데, 범죄참가성향은 연령과 확실한 역의 관계를 보인다. 높은 젊은층의 범죄율은 나이가 들수록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3) 대리인 비용 모형과 연령구조

대리인 비용 모형과 연령구조와 연결고리는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첫째, 대리인이 젊을수록 모니터링 비용이 상승하는데, 젊을수록 임금과 기업특수형 자본(firm-specific capital)이 낮은 경향과 관련이 된다. 이것은 젊을수록 나태(shirking)의 기회비용이 낮기 때문이다. 강력한 감독을 받을 확률과 연령간 역의 관계가 실증된다(Canadian General Social Survey on Work and Retirement, Cycle 9).

(4) 자본시장 불완전성과 연령구조

대부에 대한 제약은 상대적으로 소득수준이 낮은 젊은층일수록 큰 경향이 있으므로(Jappelli, 1990), 유동성 제약 확률은 연령의 함수라 할 수 있다. 미국의 경우 30세까지 유동성제약에 걸릴 확률이 약 25%이다가 이후 점점 낮아져 0%에 근접하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저축/대부 비율과 경제성과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 장년근로연령인구 비중이 커질수록 대부제약이 줄어들고 이는 이자율 상승과 대부시장의 경직으로 이어질 수 있다(Foot and Stoffman, 2000). 반면, 최대 유동성제약 연령(15-34세)의 비중이 커지면 은행이 선호하는 대부이자율이 낮아지고 이것은 신용위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 일본은 1960년에 신용위기가 있었고, 캐나다, 호주, 미국은 1980년대 초반과 1990년대 초반에 대부/저축 비율이 최고였으며, 서브프라임모기지 이자율이 최고일

때 국내생산이 하락한 경험이 있다.

유동성제약 극점인구비율이 높을수록 대부이자율이 높아진다는 사실의 심각한 함의는 다음과 같다. 미국의 예를 들면, 대부를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빈곤탈출 수단으로서의 교육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위험을 보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 교육 연수(additional years of schooling)에 따른 임금프리미엄의 확대는 소득불평등을 확대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5) 인적자본 확산과 연령구조

고령근로자의 직업안정규칙(정년보장과 같은)이 없는 상태에서는 성과주의체계 운영은 직원간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협력과 생산적 지식의 공유를 억제할 위험을 높일 수 있다. 성과주의(meritocracy)와 연공주의(seniority)간에 대한 근로자의 선호가 상이한데, 연령이 높을수록 성과주의보다 연공주의를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 따라서 조직내 연령분산(age dispersion)은 소득분배의 분산을 확대시키고 강력한 성과주의 하에서는 협력을 저하시킴에 따라 경제적 성과가 위축될 수 있다. 고령근로자가 실직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거나 엄격한 스크리닝 메커니즘이 없는 경우에 발생 가능하다(Lazear, 1998).

2. 저출산의 파급효과

인구성장은 투자를 확대시켜 경제성장을 촉진하는 효과를 가진다. 이 관점에 따르면 인구성장은 보다 많은 소비자를 창출함으로써 보다 많은 수요를 창출하게 된다. 그리고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투자가 늘어나게 될 것이고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성장을 진작하는 효과를 가진

다. 반대로, 인구가 감소하게 되면 투자가 축소되고, 궁극적으로 경제는 침체하게 된다. 이 같은 직관적인 논의 외에 구체적인 파급효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소비, 저축, 투자

재화와 서비스의 수요에 있어서 연령은 중요한 요소여서 인구의 연령 구조가 변하게 되면 소비지출의 패턴이 변화할 것이다. 수요가 특정한 생애주기 단계와 관련이 있는 재화와 서비스에 대해서, 지속적인 저출산에 따른 인구고령화는 필연적으로 수요의 변화를 야기할 것이다. 예를 들어 보건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것이고, 청년층을 위한 재화와 서비스 수요는 감소할 것이다.

그리고 이 같은 소비의 구성이 시간에 따라 변화한다고 하면, 전반적인 소비수준 또는 1인당 소비수준은 경제성장에 영향을 받게 되고, 이는 다시 기술변화와 더불어 저축과 투자에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따르면 저축은 그 자체로 라이프사이클에 따라 체계적으로 가변성을 가진다(consumption smoothing).

그러나 저출산이 저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불분명하다. 저축이 늘어날 것인지 줄어들 것인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있다. 전자는 저출산에 따라 가구의 부양부담이 줄어들고 가구내 맞벌이의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에 소득이 늘어나는 효과에 근거한다. 반면, 후자의 입장은 부(負)의 저축을 하는(저축으로 소비를 하는) 노인의 상대적 비중이 증가한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리고 노인이 생애동안 모든 저축을 소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유산상속의 동기에 따라 저축을 늘리는 효과는 없어지게 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저출산이 지속되면 가계저축에 두 가지 상충되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정리할 수 있다. 그리고 가계저축은 투자로 이어지는 총국민저축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인구대체를 이하의 출산율이 경제 전체의 저축률을 크게 변화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추론은 타당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나. 노동공급

노동력의 고령화는 저출산의 필연적 결과이다. 첫째, 저출산은 가장 직관적으로 노동력의 감소를 초래할 것이다.

둘째, 고령 근로자의 노동이동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근로자의 평균연령이 높을수록 노동이동성이 낮아질 것이고, 이는 노동시장이 경제 환경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을 저하시킬 것이다. 연금수급연령을 낮추거나 수급자격을 관대하게 하는 정책이나 노동시장 정보 제공, 그리고 북유럽 국가들의 적극적 노동시장정책과 같은 정책들이 노동이동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지만, 고령 근로자의 경우 고임금에 대한 부담이 존재한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노동생산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과 관련해서는 근로자의 기술에 영향을 미치는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 일부는 고령 근로자가 변화와 혁신에 보다 소극적이라는 주장을 하지만 이는 혁신을 위협으로 인지하느냐 혜택으로 인지하느냐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간과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고령 근로자에 대한 직업재훈련과 직업훈련의 정기적 재활용이 보다 일반화해 있다. 전체적으로 저출산 경향의 지속에 따른 노동력의 고령화가 경제성장에 기여하는 부분을 상쇄시킬 만큼 노동생산성에 심각한 위협이 되지 못할 것이다.

제4절 인구구조 변화와 불평등의 관계 선행연구

1. 국내

국내외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연구에서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와 소득, 소비불평등 증가 간의 관련성을 경험적으로 포착하고 있다. 연구마다 차이는 있지만 불평등 지수의 요인분해 등 다양한 방법론을 통해 인구구조의 변화가 불평등 증가에 일정 수준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석상훈, 2010; 성명재·박기백, 2009; 원종학·성명재, 2007; 임병인·전승훈, 2005; Ohtake and Saito, 1998; Tachibanaki, 1998; Zhong, 2011; Peichl et al., 2010). 또 다른 공통점은 이러한 인구구조변화에 따른 불평등의 변화 과정에서 공적이전 시스템 등의 소득재분배 정책이 인구고령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정적 영향을 상쇄할 수 있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밝히거나 정책함의로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Zhong, 2011; Peichl et al., 2010; Uni, 2008; 임병인·전승훈, 2005; 성명재, 2011; 김진욱·정의철, 2010).

그리고 고령화를 앞서 경험한 일본에서는 인구구조변화와 불평등 관련 논의가 활발하였다. 소득불평등의 변화에 있어 인구고령화 요인이 강조되는 것이 전체 경제의 불평등을 마치 고령화로 인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해석될 위험성,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가 소득재분배 정책에 무관심한 신자유주의적 정부성향을 옹호하는 용도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Uni, 2008a: 95). 전체 불평등에 있어 연령집단내 불평등의 기여도가 연령집단간 불평등 기여도에 상응한다는 반박 등을 고려한다면, 불평등 해소에 소득배분배 정책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것은 일본 불평등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논조라 할 수 있다.

또한 불평등과 인구구조변화 간의 관계를 밝히는 많은 연구들은 현상

을 분석하고 원인을 규명하는 취지의 문헌이 대부분으로, 정책적 제언을 풍부하게 담거나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는 못하고 있었다.

한국사회의 불평등 양상과 심화 원인 중 하나로 신광영(2009a)은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꼽았다. 고령화는 노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노인인구의 증가를 가져왔다는 것인데, 즉 외환위기 이후 기업 구조조정과 정리해고 과정에서 장년층의 해고가 대량으로 이루어지면서, 소득이 없는 인구가 늘어났고, 이들이 노인인구로 진입하면서 노인빈곤층이 확대되고 있다고 진단하였다. 그의 연구는 인구고령화와 불평등의 관계에 집중했다기보다는 불평등의 원인 중 하나로 인구구조 변화를 논의에 포함하는 수준이었다.

성명재, 박기백(2009)은 인구의 고령화가 소득분배 악화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는지를 경험적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전망을 제시하였다. 1982~1993년 기간에는 변이제공계수(SCV)로 파악한 소득불평등도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고, 이 기간 동안에는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효과는 사실상 없으며 거의 전적으로 소득분포의 변화에 따라 SCV로 추정한 소득불평등도의 하락 현상이 나타났다. 반면 1994~2008년 기간에는 소득불평등도가 크게 확대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이전 기간과는 달리 SCV의 증가에 있어 인구구조 변화에 의한 효과가 커지고 있다는 것이다.⁷⁾ 이를 통해 향후에는 인구구조의 변화에 의한 소득불평등도의 확대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망했다.

성명재(2011)는 위 연구결과에 더해, 분기별로 각 소득자의 소득(순위)이 변화할 수 있으며 그런 변화가 연간소득 단위로 측정한 소득불평등도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점에 주목하여 분기소득이동성의 변화가 연간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직접 추

7) SCV의 변화에서 인구변화가 차지하는 비중이 2000년 12.8%에서 2008년 29.0%로 높아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정하였다. 연간소득의 불평등도는 분기소득의 외형적 불평등도와 함께 분기소득간 소득이동성의 크기에도 함께 의존함을 보여주었다. 그런 관계를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여 계산해본 바에 의하면 1990년대 중반 이후 지속적으로 연간소득 불평등도가 증가된 데에는, 외형적인 불평등 크기 자체가 확대된 것도 있으나, 분기간 소득이동성이 저하됨에 의해서도 연간소득의 불평등도가 더욱 확대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2000~2008년 기간 중 연간소득 불평등도의 증가분에서 분기소득의 외형적 불평등 확대에 의한 부분이 전체의 62.9%이고 나머지 37.1%는 분기소득이동성의 저하에 기인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그만큼 소득이동성의 저하가 전반적인 소득불평등 확대에 미치는 영향이 큼을 알 수 있다. 소득이동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는 노동시장의 경직성, 경제활동참가율의 하락, 인구의 고령화 등을 꼽으며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옥, 정의철(2010)은 가구주 연령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소득불평등을 한국노동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소득원천별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령별로 나타나는 소득불평등 개선 방안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으로 2002년과 2007년 전체가구의 소득불평등도와 각 연령 집단별 소득불평등도를 측정하고 소득불평등도가 개선된 연령 집단과 악화된 연령 집단을 식별하여 각 연령 집단별로 소득불평등도를 소득원천별로 분해하여 소득원천별로 총소득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그 결과, 전체 가구에 대한 소득불평등은 2002년보다 2007년에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주 연령별로 집단화하여 분석한 결과 2002년은 30대 초반까지는 소득불평등이 개선되었지만 점차적으로 나이가 들수록 불평등이 악화되고, 50대 후반 이후 악화 정도가 증폭되는 것으로 계측되었다. 2007년의 경우에는 40대 후반을 제외하고 30대 초반 이후 지속적으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원천과 총소득 간 지니상관관계

분석에 의하면,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상관관계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서 기타소득·부동산소득이 총소득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계측되었다. 또한 공적이전소득은 총소득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임으로써 공적이전소득의 소득분배 개선효과를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다.

원종학, 성명재(2007)는 인구구조, 인구의 고령화 현상과 같이 경제외적인 요인의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친 영향에 대해 분석하였다. 연령적 측면에서 인구구성의 변화가 소득분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각 연령집단 내의 소득불평등도 변화, 연령집단 간 상대소득 격차, 연령대별 구성비의 변화 효과 등으로 세분하여 분석하는 방법이었다. 연령을 기준으로 지니계수를 분해해본 결과, 1990년대 말 또는 2000년대 이후 그룹 간 지니계수와 그룹 내 지니계수가 모두 상승 추세를 나타냈고, 이 가운데 그룹 간 지니의 상승은 주로 고령화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일반적으로 고령층일수록 지니계수가 커지고, 고령화로 인해 지니계수가 높은 집단의 가중치가 커지는 만큼, 이런 상황 하에서는 고령화가 필연적으로 지니계수를 상승시킨다는 결론을 얻었다. 최근의 지니계수 상승 추세 가운데 고령화의 기여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소득분배 격차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정책을 중요한 현안으로 꼽았다.

김용성(2005)은 미래시점에 예상되는 가구주 연령의 고령화, 가구의 핵가족화, 교육수준의 고학력화에 따른 분포를 바탕으로 이에 대응하는 가상 자료를 구축하여 2005년 ~ 2020년 동안 소득의 불평등도를 추정하였는데, 분석 대상 기간(2005~2020년) 동안 총소득의 불평등도는 소폭의 증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총소득 분포상의 하위 25% 소득수준 대비 상위 25%의 소득수준 비율은 2005년 2.163에서 2020년 2.223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소득계층 간 격차가 확대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김학주(2006)는 노인가계의 경제적 빈곤실태를 분석하기 위해 소비자

출을 주요한 지표로 하고, 7차년도 한국노동패널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노년기 소비불평등 추이와 특성을 비노인가구의 경우와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가구주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소비불평등은 크게 심화되고 있었다. 이러한 소비격차는 비노인가구보다 노인가구에서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었고, 특히 동일 소득계층에서도 노년기 소비양극화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할 때 노인가구의 최하위분위와 최상위분위간 소비지출 격차가 비노인가구의 경우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를 청·장년기 내내 축적된 자산 및 부채의 격차가 소비불평등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정진호, 최강식(2001)은 도시가계조사 자료(1990년~2000년 상반기)를 활용, 근로자 가계의 소득불평등도를 살펴 본 후 전체 불평등도를 가구주의 학력과 연령에 따라 집단별로 요인분해하여 소득불평등도의 기여도와 변화를 파악하였다. 가구주 연령별 근로소득의 불평등도 요인분해 결과, 집단 내의 불평등도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의 대부분을 설명하고 있었다. 연령이 높을수록 집단 내에서 소득불평등도가 심하였고, 전체 소득불평등도의 변화는 대부분 연령집단 내의 불평등도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석상훈(2010)은 한국노동패널 1-11차년도 자료를 활용하여 외환위기 이후 10여 년간 진행되어 온 인구구조의 변화가 소비격차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코호트 방법을 활용하여 소비격차를 연령, 세대, 연도 효과로 분해한 결과에 의하면, 세대효과는 소비격차를 완화시키고 있으나 노인 세대보다 젊은세대에서 소비격차를 개선시키는 효과는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으로 현재 젊은 세대가 자연스럽게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비격차의 문제는 지금보다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이해했다. 또한 인구구조의 변화를 소비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인으로 꼽았으며, 따라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없는

한 인구고령화가 진행될수록 그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실제 인구고령화 문제가 심각한 농어촌 지역을 분석에 포함한다면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판단했다.

신광영(2009b)은 1998년 ~ 2007년 노동패널 자료를 통해 타일 지수(Theil Index)를 분석하는 방법으로 외환위기 이후 소득 불평등을 세대와 계급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지난 10년 동안 전체 불평등이 크게 증가하였지만, 그것은 세대 간 불평등의 증가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세대 내 불평등 증가로 인한 것이었고, 특히 40대와 50대에서 세대 내 불평등이 크다는 결과를 얻었다. 이 결과를 토대로 그는 세대내 불평등은 곧 계급문제이며, 장년층과 고령층에서 세대 내 불평등이 큰 이유는 세대와 계급과의 상호작용이 뚜렷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였다.

임병인, 전승훈(2005)은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 악화의 원인이 고령화에 있다고 보고 코호트(Cohort) 분석과 연령집단별 지니계수 분해방법을 「한국노동패널」 1차 년도부터 6차 년도까지의 자료에 적용하였다. 예상했던 대로 가구주의 평균연령이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악화되었고, 지니계수 요인분해에서도 연령집단간 소득분배상태 악화가 전체소득불평등도의 악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를 바탕으로 단기와 중장기적 정책 제언을 하고 있는데, 고령계층의 세후소득 불평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노후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공적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 등과 같은 3층 보장체계구축과 관련한 적절한 정책수단이 입안되고 실행되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현재 시점에서 정책초점을 고령층의 불평등 악화 해결에 두어야 할 것을 제안하였다.

2. 국외

일찍이 고령화를 경험한 일본에서는 1990년대 들어 경제침체를 겪으면서 불평등에 대한 인구구조의 영향을 밝히려는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고, 그만큼이나 여러 가지 가설이 대립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들 연구의 대다수는 불평등에 있어 인구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의 기여도를 인정하는 한편, 일본 노동시장과 기업문화의 영향을 함께 고려하고 있다. 또한 불평등에 대한 인구고령화의 영향을 소득재분배 정책과 관련된 정부 입장과 연관하여 해석하기도 하는 등(Uni, 2008a) 고령화와 불평등의 관계는 일본 내에서 주목받고 있는 주제로, 매우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Ohtake and Saito(1998)는 일본에서 1980년대 동안 빠르게 증가한 소비불평등에 어떠한 요인들이 반영되었는지 파악하고자 하였다. 일본의 가구단위 마이크로 데이터를 활용하여 소비불평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코호트내 소비불평등은 40대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양상은 1980년대의 경제전반에 걸친 소비분배를 더욱 불평등하게 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는 1940년대에 출생한 베이비부머가 40대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보다 젊은 세대는 그들의 생애주기의 시작부터 높은 소비불평등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세대 내 불평등이 노인세대로부터 젊은세대로 세대간에 이전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로 꼽고 있다. 즉 경제전반에 걸친 1980년대 소비불평등의 증가는 인구고령화와 코호트효과의 증가, 양쪽으로부터 기인하였다고 보고 있다.

이를 통해 Ohtake and Saito(1998)는 고령화에 따른 총불평등의 증가에는 재분배정책이 불필요하겠지만 코호트효과 증가에 따른 불평등의 증가는 재분배 제도의 강화, 상속세 등의 인상과 같은 방법으로 불평등의 증가를 완화할 수 있다는 함의를 던지고 있다.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소득 간격의 차이는 큰 사회문제로 인식되기 시작하였다. Tachibanaki(1998)는 1980년대부터 일본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득불평등에 주목하였다. 일본에서 우세하게 꼽히던 소득불평등 증가의 주요한 원인은 인구의 고령화였다. 연령집단에서 소득불평등은 높은 연령에서 더 컸다. 그래서 이러한 관점에서는, 전체 경제에서의 소득불평등의 자연스러운 증가는 인구의 고령화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Ohtake(2003; 2005)는 가구소득과 지출의 전국조사의 미시데이터를 분석하고 각 연령집단내의 불평등은 매우 안정적이라는 점을 발견했다. 이러한 사실로부터 기반하여, 그는 일본의 소득불평등이란 파상적인 것이었으며, 진정한 불평등화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비록 Ohtake의 견해가 1999년부터의 소득불평등 증가를 설명하는데 있어 타당하다고는 하나, Uni(2008b)에서 보여진 것처럼, 1999년 이후부터 각 연령집단내에서 증가하고 있는 불평등에 관해서도 설명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2004년의 조사결과와 이전 1999년의 조사결과를 비교해보면, 대부분의 연령집단들에서 지니계수가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증가율은 30세 이하의 연령집단에서 특별히 높다. Ohtake를 비롯한 인구고령화 관점의 제안자들은 젊은층에서의 임금불평등의 문제를 사실로 인정하고 있다.

Ohtake와 동일한 방법으로 1999년과 2004년의 가구소득, 지출의 전국조사의 미시데이터를 사용하여, Uni(2008b)는 2인 이상 가구의 소득 불평등 변화를 분해하였다. 구체적으로, 균등화소득 혹은 지출의 log variance 변화를 다음의 세가지 요인으로 분해하였다. 코호트 효과(혹은 연령집단내 효과), 연령집단간 효과 그리고 인구학적 효과(혹은 인구고령화의 효과)가 그것이다. 그 결과, 연령집단내 효과의 log variance의 증가는 0.008로, 인구고령화의 효과(0.009)만큼이나 컸다. Uni(2008b)

는 연령집단내 소득불평등은 임금불평등의 증가에 기반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이 결과를 토대로 Uni(2008a)는 불평등 현상을 인구고령화 관점에만 치우쳐 해석하는 것이 무리가 있으며, 이러한 관점은 신자유주의적 성향의 내각이 소득재분배 정책에 대해 무관심한 것을 정당화 할 수 있다고 비판한다. Uni(2008a)에 의하면, 일본에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이 낮고 임금결정이 각각의 기업이 갖고 있는 임금시스템에 의해 주로 결정된다. 비록 세계화와 IT 기반 숙련 노동에 대한 (임금 상승)요구라는 변화가 있었지만, 이러한 변화가 곧 숙련노동자들에 대한 임금 상승을 직접적으로 이끌어내지는 못했다고 본다. 그에 의하면, 세계화와 IT산업의 임금에 대한 영향은 주로 기업의 반응에 의한 것이었다. 이러한 기업의 반응은 단지 IT와 세계화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라, 기업내부적인, 혹은 외부적인 다양한 변화에 의한 것이었다. 여기서 다양한 변화란 규제완화와 직원들의 고령화와 같은 변화를 의미한다.

Uni(2008a)는 1990년대 말 일본의 임금불평등 증가의 원인을 설명하는데 있어 다음의 기업 가설을 제시한다. 물론 인구고령화와 같은 영향이 존재하기는 하였으나 임금체계 개편의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성과기반의 임금체계의 도입과 춘계투쟁(spring labour offensive system)의 약화와 같은 것이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감안했을 때, 일본의 불평등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주목함과 동시에, 보다 사회적 맥락의 요인들, 즉 세계화 및 산업구조의 변화, 노사간 역학관계 등의 제 현상을 불평등 심화의 배후로 함께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1979년부터 시행된 ‘한 자녀 갖기’ 정책 등의 출산제한 정책으로 인해 인구증가율이 감소하고 고령화가 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사회보장이 미비한 농어촌 지역의 불평등 증가를 인구고령화 경향과 연관지어 주목하고 있다.

Zhong(2011)은 중국 농어촌지역 인구고령화와 소득불평등간 관계를 CHNS자료를 이용해 살펴보았다. 그 결과, 인구고령화가 2000년 초반 시작된 중국의 농어촌 지역 소득불평등의 급속한 증가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또한 도시지역에 대해 비슷한 분석을 시도했지만 인구변화와 소득불평등간 유의한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는데, 그 이유는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도시지역의 대다수 장년층은 농어촌지역에 없는 공적연금제도의 적용을 받기 때문으로 이해하였다. 연금은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이 도시지역 가구소득에 미치는 영향을 완충시키기 때문에 연구에서는 농어촌지역의 기초노후보장제도 확립이 소득불평등 감소에 도움 될 것이라는 정책함의를 내놓았다.

Wan(2004)역시 중국 농어촌 지역의 지역적 불평등을 경험적으로 분석하면서, 여러 정책 함의를 내놓았는데, 농어촌 지역 기업에 노동인력 고용비용을 정부 차원에서 제고할 것과 빈곤층에 대한 교육의 질과 기회의 제공, 농업 산업의 수익성 제고를 제안하고 있다.

서구사회의 불평등 연구에서도 인구구조 변화는 중요한 요인으로 주목받고 있다. Deaton and Paxson(1998)은 연령이 높아짐에 따라 건강상태의 불평등이 증가하는지, 건강과 소득의 관계가 생애주기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PSID(Panel Study of Income Dynamics) 분석을 통해 검증된 결과와 이전 NHIS(National Health Interview Survey)를 바탕으로 건강상태와 소득의 관계에서 건강상태의 생애주기별 패턴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여 함께 제시하였다. 그 결과, 경제활동능력과 소득은 건강상태의 저하에 의한 부정적 영향을 누적적으로 받고 있었다. 그에 따르면, 코호트 효과를 봤을 때 평균적인 건강상태는 시간이 지날수록 개선되었지만, 연령집단별 경향을 보면 보다 최근에 태어난 집단이 건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과 건강 사이의 증감률이 시간이 지날수록 더 강해져, 보다 최근에 태어난 연령집단일수록 소득과 건강 간의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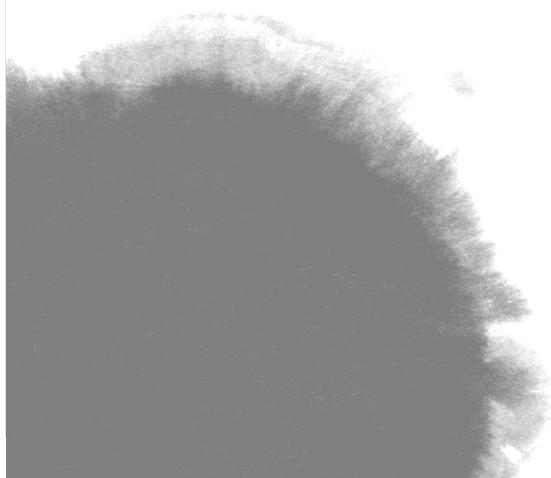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관성이 더 큰 것으로 보고하였다.

Peichl et al.(2010)는 지난 20년간 독일에서 소득불평등이 기간동안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평균적인 가구규모가 팔목할 정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현상에 주목하여 가구규모의 소형화 경향이 소득분배 변화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정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불평등 변화의 요인분해를 임금과 인구학적 영향을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만약 가구규모가 소형화되는 인구구조의 변화가 없더라도 불평등, 빈곤, 부유함의 지표는 증가했을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그 수준은 실제와 비교했을 때 두드러지게 낮았다. 게다가, 인구적 변화의 소득분배에 대한 영향력은 세전보다 세후소득에서 더 낮았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독일의 조세지원제도(tax benefit system)가 - 적어도 절대적으로는 - 가구구성의 변화의 영향력을 상쇄하는 수단이라는 것이다.

Almas et al.(2011)은 노르웨이의 남성소득 행정자료를 이용하여 1967~2000년 사이 노르웨이에서 연령조정이 소득불평등추이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 기간 동안 노르웨이에서 연령조정이 소득불평등 추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조정 이전에 전통적인 지니계수는 1967~1980년에 급감하였고, 1980~1993년 급증했다가 1993~2000년 다시 감소하였다. 전 기간동안 전체적으로 불평등이 미약하게 증가하긴 하였으나 연령조정 불평등지수에 따르면 1967~1980년 동안 보다 완만한 감소, 1980~1993년 동안 약간 증가, 1993~2000년 동안 급격한 감소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3장

인구구조와 소득불평등 동향



제3장 인구구조와 소득불평등 동향

제1 절 인구구조 동향

1. 세계적 동향

인구구조 변화는 크게 저출산과 수명연장에 기인한다. 인구구조 변화는 연령분포(population age distribution)의 변화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연령분포 변화의 주요 원인은 수명연장, 사망위험의 감소, 출산율 감소로 지목되고 있다. 이는 과거 출산율이 높고 사망률도 높은 경향에서 출산율이 낮아지고 사망률이 낮아지는 변화의 결과이다. 의학의 발달하고 위생관념이 높아지면서 사망률이 감소하기 시작했고, 이후 수 십년이 경과한 후 출산율도 감소하기 시작했다. 사망보다 출산이 많아지면서 과거 수 백년간 급속한 인구증가를 야기했지만, 이후 세계 인구분포가 젊은층에서 노년층으로 점진적으로 중심이 옮겨져왔다.

연령분포 변화의 역사적 단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1단계는 (유아)사망률이 낮아지면서 아동의 비중이 높아지는 단계(rejuvenation)이고, 2단계는 출산율이 하락하면서 아동의 비중이 감소하고, 상대적으로 근로연령 성인비중이 증가하는 단계, 그리고 3단계는 출산율과 사망률이 같이 하락하면서 아동, 근로연령 성인비중이 감소하고 노인비중이 증가하는 단계로 구분된다.

여기서 2단계는 인구학적 덩(demographic dividend), 인구학적 보너스(demographic bonus), 인구학적 기회의 창(demographic window of opportunity) 등으로 불리웠다. 이 시기에 경제성장률이 높아지고 따라서 삶의 질도 상승했던 시기였기 때문이다. 3단계로 넘어가면서 의료보장, 노후보장제도 등 공적 사회보장제도의 필요성이 커지는 단계이며, 이들 제도의 재원조달과 관련해서 세대간 형평성 문제도 야기될 수 있는, 즉 공공정책에의 도전의 시기라 할 수 있다.

인구고령화는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드러난다. 현재는 선진국일수록 노인인구의 비중이 높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는 노인인구가 개발도상국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향후 수 십년간 모든 국가들이 인구고령화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개발도상국이나 체제전환국의 고령화 속도가 선진국이 경험했던 고령화 속도보다 빠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아래 〈표 3-1〉 참조).

세계적으로 인구전환 단계는 지역별로 상이한 패턴을 보이고 있다. 특징적으로 아프리카는 여타 개발도상국과 달리 21세기 동안에도 젊은 인구구조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아프리카 인구의 41%가 15세 미만인 반면, 60세 이상 인구는 5%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2050년까지 아동인구의 비중은 29%까지 줄어들 것인 반면, 노인인구는 10%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상대적으로 더딘 인구고령화 속도는 HIV/AIDS에 따른 높은 사망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3-1〉 지역별 인구구성비 비교(2011년)

(단위: %)

지역	인구구성비			계
	0~14세	15~64세	65세 이상	
전체	26.6	65.7	7.7	100.0
아프리카	40.1	56.3	3.5	100.0
라틴아메리카, 캐리비언	27.5	65.5	7.0	100.0
북아메리카	19.7	66.9	13.4	100.0
아시아	25.6	67.6	6.8	100.0
동아시아	18.5	71.8	9.7	100.0
우리나라	15.6	73.0	11.4	100.0
유럽	15.5	68.2	16.3	100.0
북유럽	17.3	66.0	16.7	100.0
서유럽	15.7	65.7	18.5	100.0
오세아니아	23.9	65.2	10.9	100.0

자료: UN, Demographic Yearbook 2011; 통계청, 장기인구추계(우리나라)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7%에서 14%에 도달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프랑스는 100년이었고, 14%에서 21%로 증가하는데 걸리는 시기는 프랑스 40년, 일본 60년이었지만, 중국, 한국, 튀니지의 경우는 이보다 짧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의 고령화 정도는 선진국이 보다 심각한 것은 사실이지만(선진국의 노령인구 비중 21%, 개발도상국의 노령인구 비중 8%), 개발도상국의 고령화 속도를 감안하면 향후 고령화의 정도는 개발도상국에서 더욱 심각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5년 60세 이상 인구의 약 63%가 개발도상국에 분포되어 있지만, 2050년에는 79%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아래 〈표 3-2〉 참조).

〈표 3-2〉 60세 이상 세계인구의 지역별 분포

(단위: %)

	1950	1975	2005	2025	2050
개발도상국	52	53	63	70	79
체제전환국	9	10	7	5	4
선진국	39	38	30	25	18
계	100	100	100	100	100

자료: United Nations (2005a).

향후 인구고령화 전개양상의 특징을 간략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근로연령 인구 내에서의 고령화다. 2050년까지 근로연령 인구의 1/3이 50세 이상이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2005년 전세계적으로 근로연령인구(15~64세) 중 고령근로인구(50~64세)의 비중은 20%에 미치지 못했지만, 이 비율은 2050년까지 25% 정도로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선진국들의 경우 2050년까지 50세 이상 인구가 근로연령인구의 거의 약 1/3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선진국의 경우 2005년에 15~29세(youngest)와 50~64세(oldest)의 비중이 비슷하지만 점점 그 격차가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체제전환국의 경우는 두 집단간의 비중이 2020년~2025년 사이에 두 번 교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리고 50~64세(oldest)의 비중은 2047년에 최고점 도달한 후 하락할 것으로 전망된다.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1900년대 15~29세(youngest)의 비중이 50~64세(oldest)보다 컸지만 이후 수렴되는 단계에 있다. 단, 예외적으로 아프리카는 아직도 15~29세(youngest)의 비중이 더 우위에 있고, 동아시아, 태평양 지역 국가는 50~64세(oldest)가 우위에 있다.

두 번째 특징은 고령인구 자체의 고령화가 누적적으로 일어난다는 것이다. 전 세계 수준에서 가장 고령화 속도가 빠른 연령집단은 80세 이상 연령대이다. 현재 이들 연령집단의 비중은 전세계 인구의 1.5% 미만이지만 향후 40년 동안 네 배가 될 것으로(2005년 9천만명에서 2050년

거의 4억명으로) 전망되고 있다.

세 번째 특징은 노년층에서의 성별 격차의 심화이다. 세계 노인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여초현상이 심화한다. 세계적으로, 6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이 55%로 남성보다 7천만 명 더 많다. 80세 이상 인구 중 여성의 비중은 65%로 남성의 두 배에 달한다. 지역별로는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체제전환국의 여초현상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향후 시간이 갈수록 개발도상국의 여초현상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되고, 나머지 국가들은 다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같은 여초현상의 심화는 성별 사망률과 기대여명의 격차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출생시 기대여명은 전세계적으로 1950년에서 2005년까지 거의 18세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대부분 국가들에서 여성의 사망률이 남성의 사망률보다 낮다. 세계 전체적으로 보면, 여성의 출생시 기대여명이 남성에 비해 1950년에 2.8년에서 2005년에는 4.5년으로 높아졌다.

인구구조 고령화 속도를 늦추고, 인구구조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가장 실효적인 정책은 출산을 제고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출산을 제고 정책은 정치, 경제, 사회적 환경에 따라 상이한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고, 실질적인 효과가 발생하기 까지 최소 1세대라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각국은 출산을 제고를 위한 정책혼합(policy mix)을 사용하고 있다. 프랑스와 스웨덴의 예로부터 다양한 정책이 동시에 시행될 때, 미미한 출산을 제고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체적으로 정책혼합 효과발생에 25~30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다른 정책대안으로 이민정책을 들 수 있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이민정책은 선진국에서만 미약한 효과를 보일 뿐이다. 선진국에서 노인부양비를 현 수준으로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막대한 인구유입이 필요하다.

유럽 전체의 경우 연간 2,500만명의 인구유입이 있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총인구, 근로연령인구 유지 위해서도 상당한 인구유입 필요하지만, 이민인구 자체의 한계와 이민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면 그 효과는 상당히 제한적이라 할 수 있다.

2. 우리나라의 동향

가. 인구구조 고령화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인구는 1960년 73만명(전체 인구의 2.9%)에서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10년 현재 545만명(11%)이다. 통계청(2012) 추계에 따르면 2030년에 1,269만명(24.3%), 2060년에는 1,762만명(40.1%)수준으로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85세 이상 인구는 2010년 37만명(0.7%)에서 2060년 448만명(10.2%)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2010년 현재로만 본다면 노인이 4명 중 1명 수준인 일본, 이태리, 독일 등에 비해 현저히 낮으나, 2060년에는 10명 중 4명 이상으로 이태리, 독일보다도 높아질 전망이다.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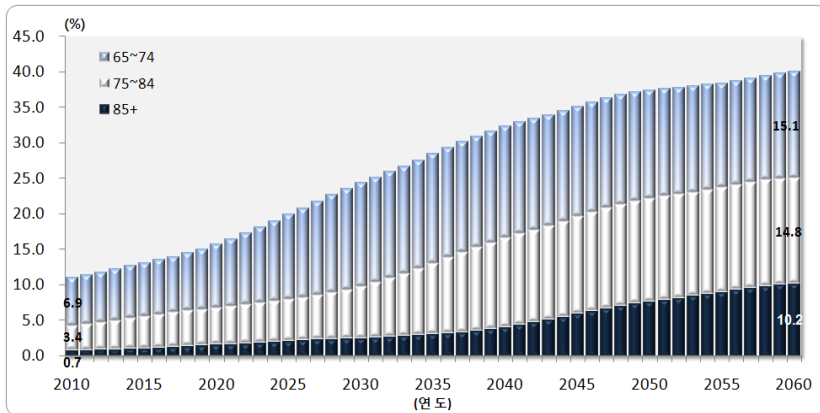
고령인구 규모는 진입하는 코호트의 규모와 기대수명 향상 속도에 따라 변화하는데, 우리나라의 고령인구는 2020년까지 연평균 약 4%p 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된다. 베이비부머가 고령층에 접어드는 2020년~2028년 사이에 연평균 5%p 대의 성장세를 보인 후 둔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고령인구를 연령계층별료(65-74세, 75~84세, 85세 이상) 구분해본다면 65-74세 인구의 경우 전체 고령인구 중 62.4%(2010년)에서

8) 다음의 내용은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인구추계: 2010년~2060년”(2012. 12. 7)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37.7%(2060년)로 감소하고, 75-84세 인구는 30.8%에서 2060년 36.9%로 증가, 85세 이상 초고령인구 비중은 6.8%에서 2060년 25.4%로 3.7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림 3-1〕 총인구 대비 연령계층별 고령인구 구성비, 201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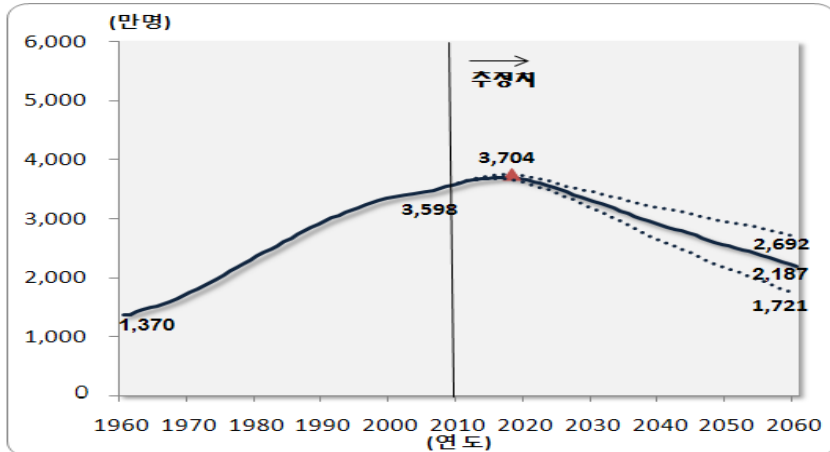


주: 중위가정 기준
자료: 통계청(2012a)

15세에서 64세까지의 생산가능인구 또한 2016년 3,704만명(인구의 72.9%)을 정점으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는 1960년 1,370만명, 2010년 현재 3,598만명(전체인구의 72.8%), 2016년의 3,704만명까지 증가하였다가 2050년까지 1천만명 이상 감소하여 2060년에는 2,187만명(전체인구의 49.7%) 수준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9) 현재 우리나라의 15~64세 인구는 2010년 현재 10명중 7명꼴로 주요국가들 중 가장 높은 수준이나, 2060년에는 가장 낮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

9) 통계청 추계의 중위가정 기준

[그림 3-2] 가정별 15-64세 인구, 196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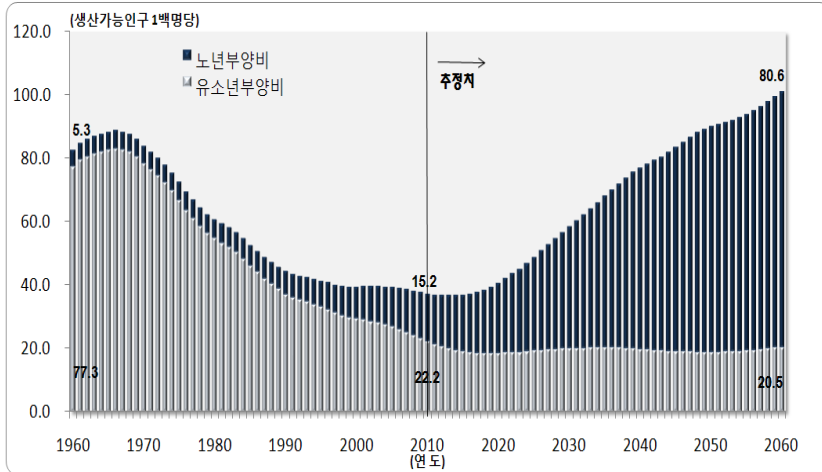


주: 가운데 실선이 중위가정 기준 추세선임.
 자료: 통계청(2012a)

이러한 추세대로라면 2060년에는 생산가능인구 10명이 10명(노인 8명과 어린이 2명)을 부양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산가능인구 1백 명당 총부양인구는 2012년 36.8명까지 낮아진 후 증가하여 2040년 77명, 2060년 101명으로, 부양자보다 피부양자가 많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2020년 이후 총부양비는 증가하여 베이비부머가 고령인구에 진입하는 2028년경까지 급증한 뒤, 이후 완만한 추세로 증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40년의 총부양비는 1973년의 77.8명과 유사한 수준이지만, 다른 점은 1970년대 초반 피부양인구의 대부분은 유소년이었고 2040년대의 피부양인구의 대부분은 고령자라는 점이다. 노년부양비¹⁰⁾는 2010년 현재 15.2명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인구 진입 및 기대수명 증가로 인하여 2030년 38.6명, 2060년 80.6명 수준으로 급증할 것이 예상된다.

10) 노년부양비 = (65세이상 인구) / (15~64세 인구) × 1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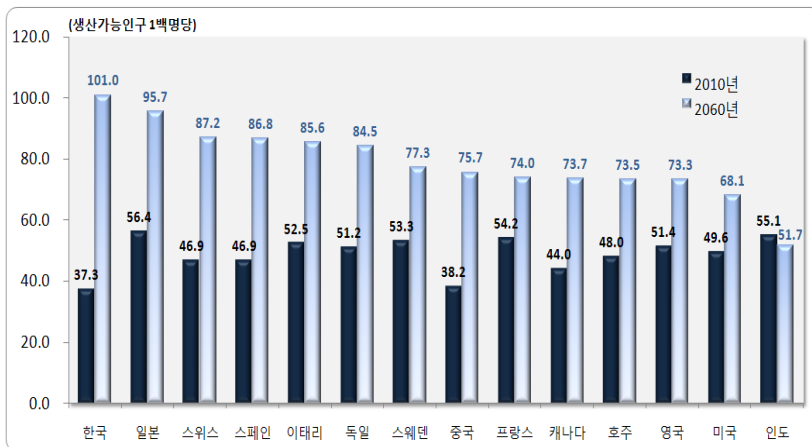
[그림 3-3] 유소년부양비 및 노년부양비, 1960-2060



자료: 통계청(2012a)

또한 2010년 한국의 총부양비는 일본, 프랑스, 미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2060년에는 일본과 함께 부양비가 가장 높은 나라가 될 것으로 통계청은 전망하고 있다.

[그림 3-4] 국가별 총부양비 추이, 2010-206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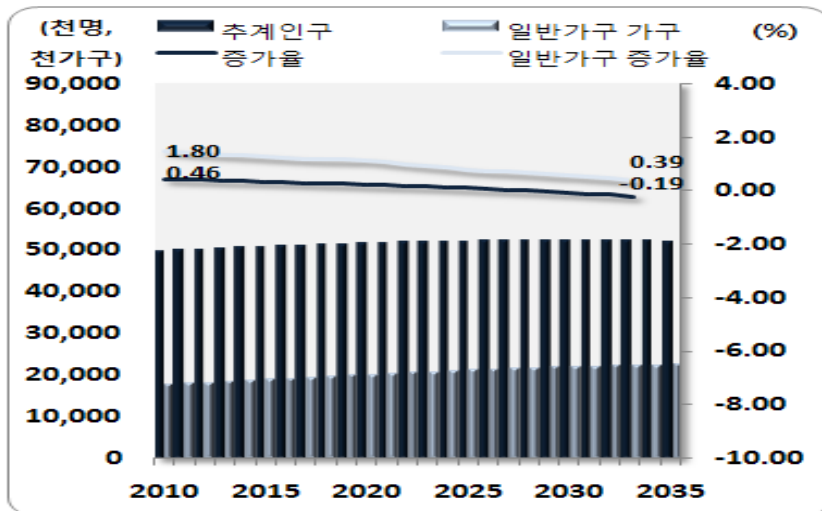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a)

나. 가구구조 변화

통계청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10년 현재 총가구는 1,735만 9천 가구이고, 2035년까지 2,226만 1천 가구로 1.3배 증가할 전망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인구는 2030년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가구 수는 1인 가구, 부부가구 등 가구분화 및 해체로 2035년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¹¹⁾

[그림 3-5] 가구 및 인구 증가(2010~2035)



자료: 통계청(2012b)

또한 고령화가 진행됨에 따라 우리나라의 평균가구원수는 2010년 2.71명에서 2035년 2.17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나타난다¹²⁾.

11) 다음의 내용은 통계청 보도자료 “장래가구추계: 2010년~2035년”(2012. 4. 26)을 바탕으로 재구성하였다.

12) 2010년 평균가구원수 2.71명은 뉴질랜드(2006, 2.6명), 미국(2010, 2.6명)과 유사한 수준이며, 2010년 전후의 다른 비교국 보다는 많은 수준임. 2035년 평균가구원수 2.17명은 2011년의 노르웨이(2.2명), 네덜란드(2.2명), 오스트리아(2.3명) 및 2030년 일본(2.3명)과 유사한 수준임.

3인 이하 가구는 증가하고, 4인 이상 가구는 감소하여 가구규모의 축소화가 꾸준히 진행될 것으로 파악된다. 2인 이하 가구는 2010년 835만5천 가구(48.1%)에서 2035년 1,520만7천 가구(68.3%)로 증가할 전망이다. 이 중 1인 가구, 2인 가구가 각각 34.3%, 34.0%로 2035년 전체가구의 68.3%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가구원수별 가구구성비는 2010년 현재 2인 > 1인 > 4인 > 3인 가구 순이던 것이, 2012년 이후는 1인 > 2인 > 3인 > 4인 가구 순이 될 것으로 보인다.

〈표 3-3〉 가구원수별 가구(2010~2035)

(단위: 천 가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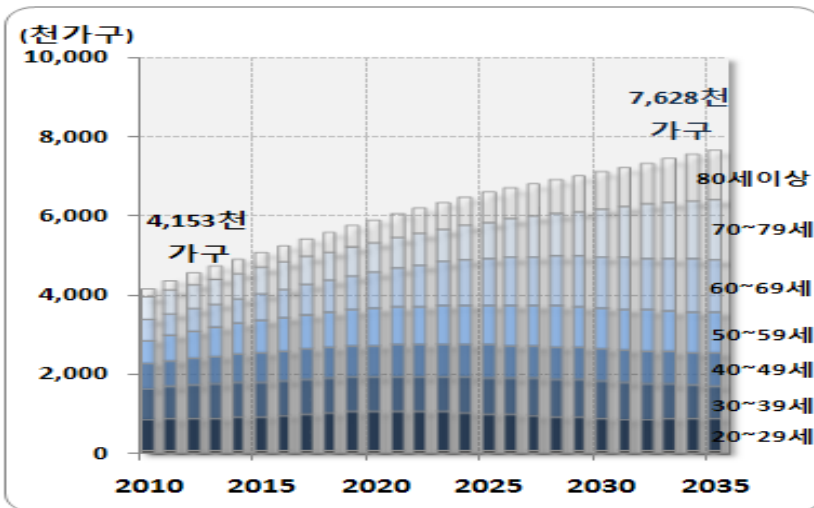
구분		2010(a)	2012	2015	2025	2035(b)	2010~2035 (b/a)
전체 가구 수		17,359	17,951	18,705	20,937	22,261	1.28
가 구 구 성 비	1인	23.9	25.3	27.1	31.3	34.3	1.84
	2인	24.2	25.2	26.7	31.2	34	1.8
	3인	21.3	21.3	21.3	20.6	19.4	1.17
	4인	22.5	20.9	18.8	13.2	9.8	0.56
	5인	6.2	5.6	4.7	2.8	1.9	0.39
	6인	1.4	1.2	1	0.6	0.4	0.39
	7인~	0.5	0.4	0.3	0.2	0.1	0.33

자료: 통계청(2012b)

2010년 현재 우리나라의 1인 가구 구성비는 23.9%로 뉴질랜드(2006년, 22.6%)와 유사한 수준이며 독일(2010년, 40.2%), 노르웨이(2011년, 39.7%), 네덜란드(2011년, 37.0%) 등 다른 비교국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다. 전술한 것처럼, 우리나라의 1인 가구의 비중은 2035

년 34.3%로 변화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0년 일본(32.3%)보다 2.0%p 높고, 2011년의 오스트리아(36.3%)보다 2.0%p 낮은 수준이다. 기대수명의 연장, 독거노인 증가 등으로 60대 이상 1인 가구가 급격하게 증가 하고 있으며, 추계결과에서는 2035년에 70대 1인 가구가 151만3천 가구(19.8%)로 가장 많고, 60대 이하에서는 연령이 낮을수록 1인 가구의 비중이 적어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65세 이상 연령층의 1인 가구 증가는 연평균 9만5천 가구로, 전체 1인 가구 증가의 68.3%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5세 이상 1인 가구도 연평균 1만9천 가구 증가, 전체 1인 가구 변화의 13.9%를 설명하고 있었다.

[그림 3-6] 연령별 1인가구 추이 (2010~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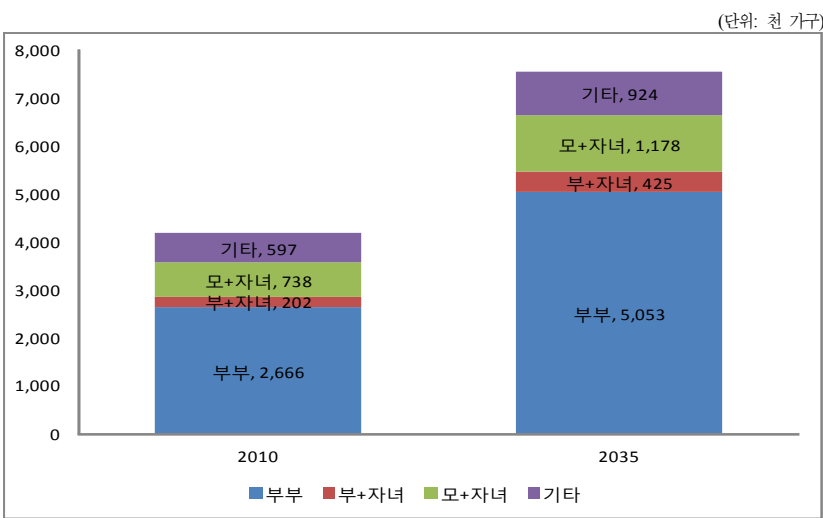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b)

전체가구 중 2인 가구의 비중은 2010년 24.2%에서 2035년 34.0%로 9.8%p 증가할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가구유형별로 살펴보면 2010년에는 부부가구가 266만6천 가구(63.4%), 모+자녀가구가 73만 8천가구(17.6%)였다. 이후 2인 가구 중 부부가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모+

자녀가구, 기타가구의 비중은 점차 감소하여 2035년의 부부가구는 66.7%, 모+자녀가구는 15.5%가 될 전망이다. 2인 가구 중 부부가구는 연평균 9만5천 가구가 증가하여, 전체 2인 가구 증가의 70.7%를 설명하고 있다.

[그림 3-7] 가구유형별 2인가구 추이(2010~203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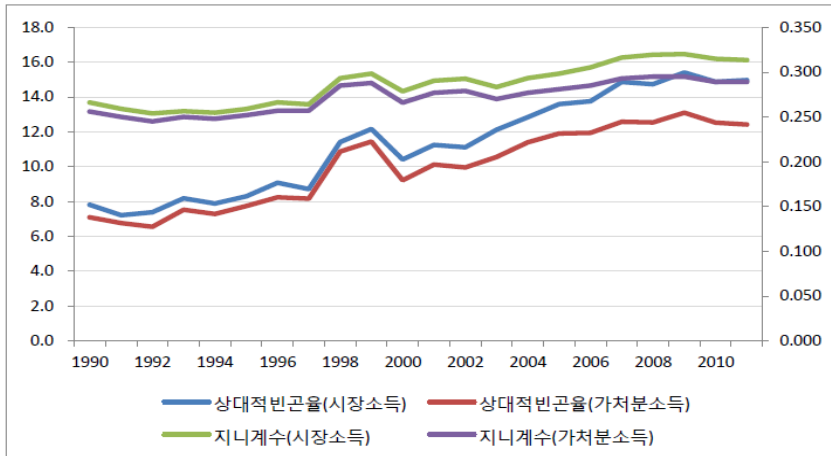
자료: 통계청(2012b)

제2절 소득불평등 동향¹³⁾

1. 상대적 빈곤율과 지니계수의 변화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기준)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1990년 7.8%에서 2011년 15.0%로 증가하여 20여년간 약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1990년 7.1%에서 2011년 12.4%로 약 75% 상승하였다. 전체적으로 빈곤율은 증가했지만 시장소득에 비해서는 다소 상승폭이 낮아서 정부의 조세-이전체계의 효과를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지니계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0년 0.266에서 2011년 0.313으로 증가했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1990년 0.256에서 2011년 0.289로 증가하였다. 상대적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이 기간동안 소득불평등도도 크게 상승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8] 상대적 빈곤율, 지니계수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13) 소득불평등 동향은 김문길(2012)의 내용을 재정리한 것임을 밝혀둔다.

2. 소득계층별 규모 변화

중위소득 기준으로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의 비중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빈곤층의 규모 변화는 중위소득 50% 미만의 상대적 빈곤율 변화로 파악했다. 변화 추이는 아래 그림 중 오른쪽 그림으로 쉽게 살펴볼 수 있다. 1990년부터 1997년까지 완만한 상승을 보이다가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급격히 상승해 1999년에 정점을 찍고 2000년 들어 조금 하락했지만 이후 꾸준히 상승하는 모양을 띈다. 현재는 IMF 경제위기 직후의 정점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한편, 부유층은 중위소득 150%를 초과하는 상대적 부유율의 변화로 파악할 수 있다.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상대적 부유율은 1990년 17.5%에서 1997년까지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을 하다가 외환위기를 겪은 1998년 19.5%로 다소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꾸준히 증가하면서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에 21.2%로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이후 조금씩 하락하는 추이가 있지만 현재는 빈곤율과 마찬가지로 IMF 경제위기 직후의 정점보다 높은 수준에 이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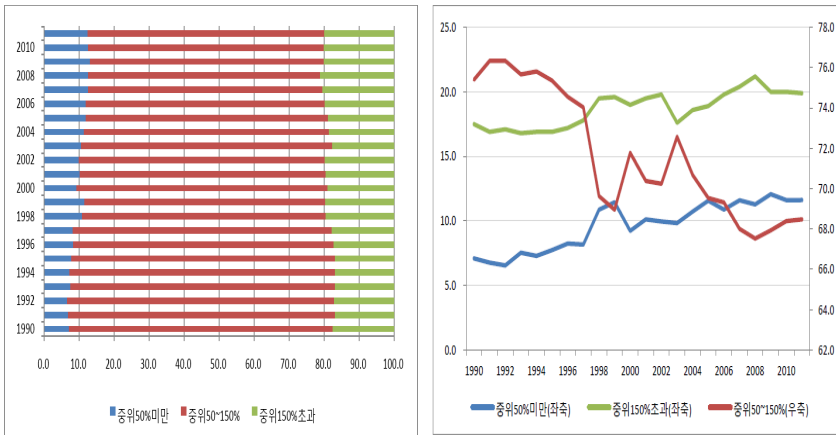
빈곤층과 부유층의 변화추이는 상당히 유사한 모양을 가진다. 두 계층 모두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추이를 보인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후반 두 차례의 경제위기 상황에서 급증하는 패턴도 유사하다. 이처럼 빈곤층과 부유층이 동시에 확대되는 것은 가운데 계층, 즉 중산층의 규모가 축소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래 그림 오른쪽 그림에서 보듯이 중산층은 빈곤층과 부유층과 달리 하락하고 있다. 왼쪽 그림에서 빈곤층과 부유층이 확대되면서 중산층의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모양세를 확인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중산층 규모의 변화를 살펴보면,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중산층은 1990년 75.4%에서 외환위기를 겪은 직후인 1999년에

69.0%로 급감했다가 경기회복에 따라 2000년, 2003년에 71.8%로 조금 증가했지만 다시 급격한 감소세를 보이며 세계금융위기를 겪은 2008년에는 66.3%까지 감소하였다. 이후 다시 완만한 증가세를 보이기는 하지만 1990년에 비해 13.4%가 줄어들었다.

이것은 우리 사회가 중산층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소득분배 상황이 양극화하고 있는 상황을 보여준다.

[그림 3-9] 빈곤층, 중산층, 부유층 규모변화 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3.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 비율 변화

지니계수처럼 잘 활용되지는 않지만 소득분배 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의 비율을 들 수 있다. 한 사회의 소득분포가 완전히 정규분포를 이룬다면 평균소득과 중위소득은 같아진다. 이 경우 이 비율은 1이 된다. 따라서 이 비율이 가까울수록 중산층의 규모가 두터운, 즉 소득분배가 균등한 사회라 할 수 있다. 반대로 이 비율이 1보다 더 작아질수록 나머지 계층(특히 상위소득계층)의 소득에 비해 중산

층의 소득이 더 줄어드는 것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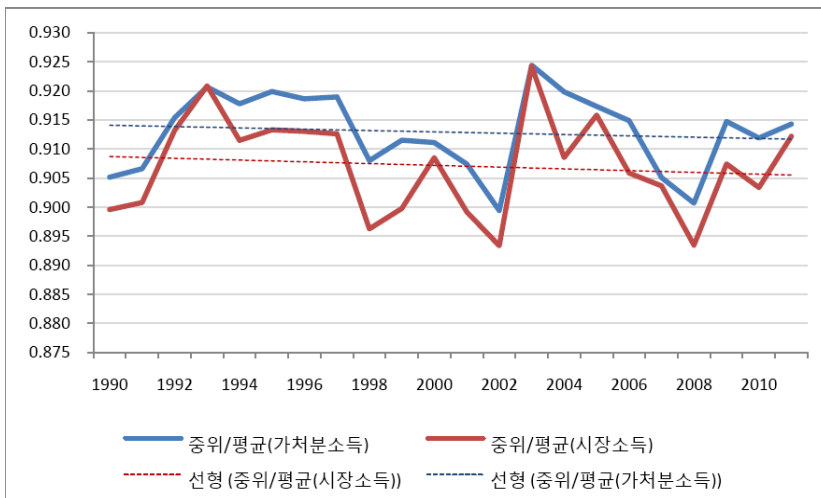
이것은 선진국인 EU와 OECD 국가들이 과거 빈곤선의 기준을 평균 소득으로 사용하다가 최근 중위소득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 관련이 된다. 즉, 선진국들의 경우도 소득분배가 악화하면서 평균소득으로 빈곤율을 포착할 경우 빈곤율이 상당히 높아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중위소득을 빈곤율을 측정하기 시작했다. 실제 OECD국가들은 1980년대 초중반부터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 비율이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주요 국가별로 살펴보면 미국, 독일, 일본, 핀란드, 캐나다, 이태리, 노르웨이는 강한 감소세를 보이는 한편, 영국, 프랑스, 스웨덴, 네덜란드, 뉴질랜드, 그리스, 덴마크는 약한 감소 또는 약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OECD, 2008).

우리나라의 경우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평균소득 대비 중위소득 비율을 살펴보면,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최저 0.893(2002년, 2008년)에서 최고 0.924(2003년)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면, 시장소득에 비해서는 다소 높은 수준을 유지하면서 최저 0.899(2002년)에서 최고 0.924(2003년) 사이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다.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보더라도 전체적으로 감소하는 추이를 보인다. 두 비율 사이의 격차는 조세-이전체계의 작동에 의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변화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경제위기 상황에서 크게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두 차례의 경제위기 국면에서 이 비율은 최저치로 하락했는데, 이는 이 시기 소득불평등이 가장 심화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먼저 1998년 첫 번째 위기의 영향에 따라 시장소득 기준 0.896, 가처분소득 기준 0.908로 모두 1990년대 최저치로 떨어졌다. 이후 2003년 최고치에 이르기까지 계속 상승하다가 두 번째 경제위기 국면에서는 시장소득 기준 0.893, 가처분소득 기준 0.901로 각각 역대 최

저치로 하락하였다. 그리고 이후 다시 조금씩 상승하는 추이를 보인다. 이 같은 변동 추이는 위 [그림 3-9]의 우측의 중산층 규모변화추이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림 3-10] 중위소득/평균소득 비율 변화추이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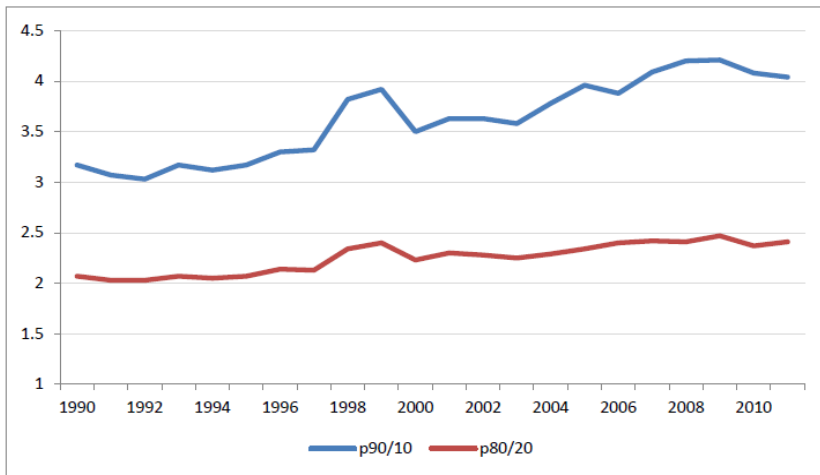
4. 분위수배율 변화

분위수배율은 하위 소득 대비 상위 소득의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이다. 따라서 분위수배율이 클수록 소득불평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통상 하위 20% 소득 대비 상위 20% 소득의 비율인 $p80/20$ 을 많이 사용한다.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가처분소득 기준 분위수배율($p80/20$)을 살펴보면, 1990년 2.07배에서 2011년에는 2.41배로 증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2.47배 보다는 다소 감소하였지만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의 2.40배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조금 더 극단의 상황을 보기 위해서 $p90/10$ 을 살펴보면, 1990년 3.17배에서

2011년에는 4.04배로 증가하였다. 2008년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에 4.21배까지 증가했던 것에 비해서는 다소 하락했지만 IMF 경제위기 직후인 1999년 3.92배보다 높은 수준이다.

결국 우리나라 p80/20은 1990년 약 2배에서 2011년에는 2.5배 가까이 커졌고, p90/10은 1990년 약 3배에서 2011년에는 약 4배를 상회하는 정도로 커졌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처럼 소득계층간 소득격차는 해가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10분위 중 최하위계층 대비 최상위계층의 소득배율의 격차가 보다 급격하게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소득양극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 또한 1990년대와 2000년대 말 두 차례의 경제위기에 대한 영향도 최하위계층 대비 최상위계층 소득배율에 보다 크게 미친 것으로 확인돼, 경제위기시에 최상위계층과 최하위계층의 소득격차가 더 커졌음을 시사한다.

〔그림 3-11〕 분위수배율 변화추이(가처분소득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5.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 변화

소득계층별로 소득증가율을 살펴보는 것은 소득불평등의 양상을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소득계층별 소득증가율 추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1인 가구를 제외한 도시가구의 균등화가처분소득을 2011년도 기준으로 할인(deflated)하여¹⁴⁾ 이를 5분위로 구분하였다. 변화 추이를 보다 선명하게 확인하기 위해 1990년부터 2011년까지의 연도별 변화보다는 5년간 변화를 살펴보기로 한다. 단, 2006년부터 2011년은 6년간의 변화를 보이기로 한다.

먼저 전기 대비 소득증가율¹⁵⁾을 보면, 1분위는 1900년 대비 1995년의 소득증가율이 39.2%였다가 IMF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6년 대비 2000년의 소득증가율은 -4.2%로 감소하였다. 그리고 2001년 대비 2005년 소득증가율은 8.8%로 나타났고, 이후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이 반영된 2006년 대비 2011년 소득증가율은 9.8%로 나타났다. 반면, 5분위는 1990년 대비 1995년 소득증가율이 38.1%였다가 IMF 경제위기의 영향을 받은 1996년 대비 2000년의 소득증가율은 5.1%로 증가율이 크게 둔화하였지만 1분위처럼 소득이 감소하지는 않았다. 2001년 대비 2005년의 소득증가율은 22.4%로 전기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이 반영된 2006년 대비 2011년의 소득증가율은 16.5%로 나타났다. IMF 경제위기를 겪기 전에는 모든 소득분위에서 40% 내외의 높고 고른 증가율을 보이다가, 이후부터는 시간이 갈수록 저소득층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고소득층의 소득증가율이 더욱 커지는 경향을 보이기 시작했다. IMF 이후 소득분배의 양상이 달라지기 시작했음

14) GDP 디플레이터를 사용하였다.

15) 기간평균이 아니라 연도간 증가율이다. 즉, 90-95기간 증가율은 90년 대비 95년의 증가율을 의미한다.

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특히, 1분위 소득 증가율이 여타 분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특징을 보인다.

이 같은 경향은 1990년을 기준으로 한 누적 소득증가율을 살펴보면 보다 뚜렷하게 나타난다. 2000년까지 1분위는 33.4% 증가한데 비해, 2~5분위는 각각 42.9%, 45.8%, 48.7%, 45.2% 증가하여 1분위와 나머지 분위간의 격차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2011년까지의 증가율을 보면 1분위는 59.9%인데 비해 2~5분위는 각각 91.7%, 101.1%, 105.5%, 107.7%로 1분위와의 증가율 격차가 더욱 벌어졌음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와 무직자로 구성된 도시 비근로자 가구를 따로 떼서 보면 소득분위별, 시기별 소득증가율에 있어서 더욱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있다. 도시 비근로자 가구의 1분위는 1996년 대비 2000년의 소득증가율이 -4.4%로 소득이 감소했다가 2001년 대비 2005년의 소득증가율은 5.7%로 소득이 증가세로 전환하였다. 그리고 세계금융위기의 영향으로 2006년 대비 2011년 소득증가율은 -6.2%로 다시 감소세로 돌아섰다. 같은 기간 사이에 도시가구 전체의 소득이 9.8% 증가한 것과 비교할 때 상당한 격차가 발생했다. 5분위의 경우는 1996년 대비 2000년, 2001년 대비 2005년에는 도시가구 전체에 비해 소득증가율이 낮지만, 2006년 대비 2011년 소득증가율이 22.7%로 같은 기간 도시가구 전체의 소득증가율 16.5%를 상회한다.

1990년 대비 2011년의 소득증가율을 보면 보다 뚜렷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다. 도시 비근로자 가구의 경우 1분위 소득증가율이 30.8%로 도시가구 전체 소득증가율(59.9%) 보다 20% 포인트 가까이 낮는데 반해, 5분위의 경우는 105.1%로 도시가구 전체(107.2%)에 비해 2.1% 포인트 밖에 낮지 않다.

종합해보면, 소득하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이 소득상위 계층의 소득증가율에 비해 낮아 소득격차가 더욱 확대되었음을 알 수 있고, 증가율의 격

차는 근로자가구를 제외한 비근로자가구에서 더욱 크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두 번째 결과는 주요 OECD 국가에서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자의 소득분배가 보다 불평등하다는 사실(OECD, 2011)이 우리나라에서도 확인된다는 최근의 실증연구 결과(강종구 외, 2012)와 상응한다 할 수 있다.

〈표 3-4〉 도시가구 유형별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추이

구분	(단위: %)									
	1분위		2분위		3분위		4분위		5분위	
	A	B	A	B	A	B	A	B	A	B
<전기 대비>										
90~95	39.2	38.0	41.3	41.1	42.2	42.6	41.5	41.5	38.1	38.5
96~00	-4.2	-4.4	1.1	0.4	2.6	1.9	5.1	5.4	5.1	1.4
01~05	8.8	5.7	17.6	15.8	20.6	18.3	20.6	18.7	22.4	19.1
06~11	9.8	-6.2	14.1	10.1	14.4	12.2	14.6	12.3	16.5	22.7
<1990년 대비>										
90~95	39.2	38.0	41.3	41.4	42.2	42.6	41.5	41.5	38.1	38.5
96~00	33.4	32.0	42.9	41.9	45.8	45.3	48.7	49.2	45.2	40.4
01~05	45.1	39.5	68.1	64.4	75.8	71.9	79.3	77.1	77.8	67.2
06~11	59.9	30.8	91.7	81.8	101.1	92.8	105.5	98.9	107.2	105.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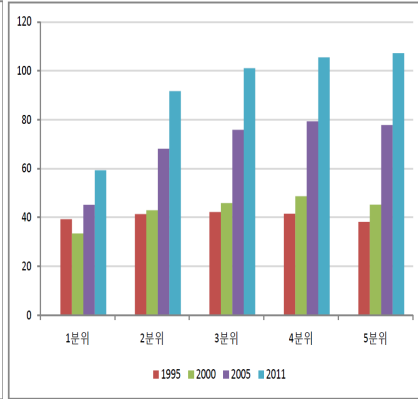
주: A(도시가구 전체), B(도시비근로자 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그림 3-12] 도시가구 유형별 소득분위별 소득증가율 추이(좌: 전년도 대비, 우: 1990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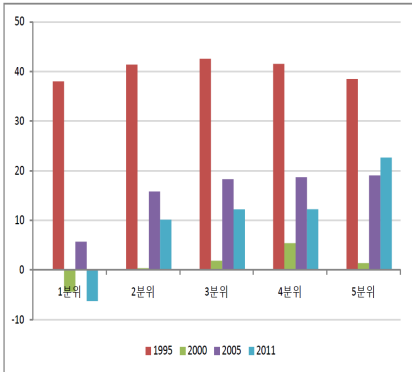
〈도시 가구 전체: 전 기간 대비〉



〈도시 가구 전체: 1990년 대비〉



〈도시 비근로자 가구: 전 기간 대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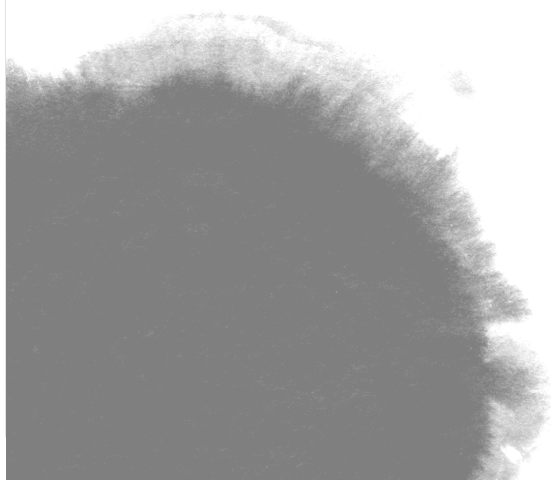
〈도시 비근로자 가구: 1990년 대비〉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각년도 원자료

4장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4장 인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제1 절 가구구조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방법론: 가중치 조정방법

가중치 조정방법은 노동경제학에서 임금과 부(wealth)의 불평등 연구에서 사용되기 시작했다. Di Nardo, Fortin, and Lemieux(1996)는 1970년대에서 1990년대 초반까지 미국의 임금분배의 변화를 야기하는 제도 및 노동시장의 영향을 분석하는데 있어서 가중치 조정방법을 사용하였다. Lumieux(2006)는 교육과 임금불평등간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이 방법을 사용한 바 있다. 가구구조의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데 이 방법을 사용한 연구로 Bover(2008)가 있다. Bover는 미국과 스페인의 가구구조의 차이가 소득불평등을 야기한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스페인의 가구구조를 미국의 가구구조에 적용해 미국의 반사실적 소득분포를 파악하고, 이를 미국의 실제 소득분포와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Peichl et al.(2010)은 독일의 가구구조 변화가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비교연도의 가구구조를 적용한 반사실적 소득분포와 실제 소득분포를 비교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eichl et al.(2010)을 따라 우리나라의 1990년~2011년 사이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1990년의 가구구조를

가정한 2011년의 반사실적 소득분포와 2011년의 실제 소득분포를 비교하는 방식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서 Di Nardo et al.(1996)가 가중치 조정(re-weighting)을 통해 반사실적 밀도함수(counterfactual density function)를 추정한 방법을 채용하였다.

개별 가구는 가구특성(x), 소득(y), 기간(t)의 벡터로 표현될 수 있으며, 3가지 벡터들의 결합분포함수 $F(y, x, t)$ 에 포함된다. 소득과 가구특성의 결합분포함수는 조건분포함수 즉, $F(y, x|t)$ 로 정의된다. 한 기간의 소득의 밀도함수 $f_t(y)$ 는 가구특성과 시간에 대한 조건부 소득밀도함수로써 다음과 같이 표현될 수 있다.

$$f_t(y) = \int dF(y, x|t_{y,x} = t) = \int f(y|x, t_y = t) dF(x|t_x = t) \quad (1a)$$

$$\equiv f(y, t_y = t, t_x = t) \quad (1b)$$

여기서 2011년의 소득분포 $F(y|x, t_y = 2011)$ 는 1990년 가구특성의 분포 $F(x|t_x = 1990)$ 와 독립적이라고 가정하고, 반사실적 밀도함수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다.

$$F(y, t_y = 2011, t_x = 1990) = \int f(y|x, t_y = 2011) dF(x|t_x = 1990) \quad (2a)$$

$$= \int f(y|x, t_y = 2011) \psi_x(x) dF(x|t_x = 2011) \quad (2b)$$

여기서 가중치조정함수 $\psi_x(x)$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psi_x(x) \equiv \frac{dF(x|t_x = 1990)}{dF(x|t_x = 2011)} \quad (3)$$

1990년과 2011년 사이의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2011년의 소득과 1990년의 가구구조를 가정한 반사실적 분포 $M(\cdot)$ 과 실제 관측된 2011년 소득분포를 비교한다..

$$\delta = M(f(y, t_y = 2011, t_x = 2011)) - M(f(y, t_y = 2011, t_x = 1990)) \quad (4)$$

가중치조정함수 $\psi_x(x)$ 는 엄밀하게는 다른 인구 및 가구특성의 변화를 통제한 상태에서 추정을 해야 하겠으나(Di Nardo et al., 1996), 본 고에서는 단순화를 위해 이들 변수를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한 OECD(2008)의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

2. 분석자료와 기술통계

본 연구에서는 통계청의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동 자료에서 장기시계열을 확보하기 위해서 2인 이상 도시가구를 대상으로 하였다. 1990년을 기준년도로 하고, 가장 최근인 2011년을 비교년도로 하였다. 동 기간 동안 가구규모, 가구구성과 관련한 기술통계는 아래 표와 같다.

2인 가구의 비중은 1990년 10.4%에서 2011년 28.1%로 세 배 가까이 증가했다. 3인 가구는 1990년 22.1%에서 2011년 27.5%로 5.4% 포인트 증가하면서, 2인 가구와 3인 가구의 비중이 거의 비슷해졌다. 표준가구 유형이라 할 수 있는 4인 가구는 1990년 38.6%에서 2011년

35.0%로 3.6% 포인트 감소했고, 5인 가구와 6인 이상 가구 또한 상당히 큰 폭으로 감소했다.

14세 이하 아동이 있는 가구의 변화를 살펴보면, 아동이 없는 가구는 1990년 32.0%에서 2011년 59.8%로 거의 두 배 가까이 증가해 아동이 없는 가구가 절반을 넘게 되었다. 아동이 1명인 가구는 1990년 36.5%에서 2011년 19.7%로 크게 줄었다. 아동이 2인 가구 또한 큰 폭으로 줄었다.

한편, 60세 이상의 노인이 있는 가구를 보면, 노인이 없는 가구는 1990년 85.6%에서 71.2%로 14.4% 포인트 감소했고, 노인이 1명인 가구는 1990년 11.6%에서 2011년 14.4%로 2.8% 포인트 증가했으며, 노인이 2명 이상인 가구는 1990년 2.8%에서 2011년 14.4%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같은 기간 평균가구원수도 4.0명에서 3.3명으로 축소되었다. 가구주의 평균연령은 39.0세에서 49.0세로 약 20여년 동안 10세가 높아졌다.

〈표 4-1〉 가구규모 및 가구구성 변화 추이

(단위: %, 명, 세)

구분		1990	1995	2000	2005	2011
전체 가구	2인 가구	10.4	14.5	19.8	24.0	28.1
	3인 가구	22.1	24.3	26.8	28.6	27.5
	4인 가구	38.6	42.2	38.7	36.4	35.0
	5인 가구	18.9	14.0	11.2	8.6	7.8
	6인 이상 가구	10.0	5.0	3.5	2.4	1.4
아동 가구원 수	0인	32.0	41.1	53.8	54.7	59.8
	1인	36.5	32.1	19.3	21.1	19.7
	2인	30.4	25.6	24.4	21.3	18.6
	3인 이상	1.1	1.2	2.5	2.9	1.9
노인 가구원 수	0인	85.6	81.4	77.7	76.5	71.2
	1인	11.6	13.8	14.4	13.8	14.4
	2인 이상	2.8	4.8	7.9	9.7	14.4
평균가구원수		4.0	3.7	3.5	3.4	3.3
가구주평균연령		39.0	41.4	44.4	46.3	49.0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먼저, 빈곤율과 불평등 지수의 변화는 아래 표에 정리되어 있다. 중위 소득 50%를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 1990년 7.8에서 2011년 14.0%로 크게 확대되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같은 기간 7.9%에서 12.7%로 확대되어 시장소득에 비해서는 확대폭이 크지 않아 공적이전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작동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4-2〉 연도별 빈곤과 불평등 정도의 추이

소득구 분	지수	1990	1995	2000	2005	2011
시장소 득	빈곤율	7.8	8.3	10.4	13.1	14.0
	부유율	18.4	18.1	19.9	21.1	22.9
	지니계수	0.266	0.259	0.279	0.298	0.313
	GE(0)	0.122	0.119	0.146	0.182	0.222
	GE(1)	0.120	0.110	0.128	0.149	0.162
	GE(2)	0.140	0.123	0.138	0.163	0.178
가처분 소득	빈곤율	7.9	8.3	10.4	12.6	12.7
	부유율	15.6	15.6	16.4	17.6	19.2
	지니계수	0.256	0.252	0.266	0.281	0.289
	GE(0)	0.112	0.110	0.126	0.144	0.154
	GE(1)	0.111	0.104	0.115	0.130	0.137
	GE(2)	0.128	0.116	0.124	0.147	0.151

주 1: 빈곤율은 중위소득 50%기준의 상대적 빈곤율임

2: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같은 기간동안 소득분배 상황도 다소 악화한 것으로 확인된다.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는 0.266에서 0.313으로 증가했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256에서 0.289로 확대되었다. 1990년에 비해 2011년의 공적이전 효과가 큰 것을 알 수 있다. 일반화 엔트로피지수(GE)를 통해서도 불평등도가 확대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저소득층의 소득분배 변화를

보다 민감하게 반영하는 GE(0) 지수는 시장소득 기준으로 0.122에서 0.222로 확대되었고,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0.112에서 0.154로 확대된 것을 알 수 있다. 마찬가지로 2011년의 공적이전 효과가 1990년에 비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2000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도입, 2009년 기초노령연금제도 도입 등의 효과로 유추할 수 있겠다.

3. 분석결과

1990년과 2011년 사이 가구구조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한 방법으로 동 기간의 실제 불평등지수 변화와 가구구조가 변하지 않았다고 가정했을 때의 불평등지수 변화를 비교하는 방법이 있음을 앞서 언급했다. 즉, 1990년 가구구조 분포를 2011년도에 적용해서 불평등지수 변화를 관찰하는 것인데, 반사실적(counterfactual) 인구가중치를 2011년도 표본에 적용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른 조건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하는 OECD의 방식을 따르기로 한다(OECD, 2008).

반사실적 인구가중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tilde{w}_i^{2011} = w_i^{2011} \cdot \frac{v_{k,i}^{1990}}{v_{k,i}^{2011}} = w_i^{2011} \cdot \psi_x(x) \quad (5)$$

여기서 w_i^{2011} 는 2011년 개인 i 의 실제 인구가중치를, $v_{k,i}$ 는 i 가 속한 집단의 인구비중을 각각 뜻한다.

본고에서는 이와 같은 가중치조정을 적용해서 빈곤지수와 몇 가지 불평등지수를 계산해 볼 것이다. 1990년과 2011년 사이에 가구구조의 한

계분포(marginal distribution of household structure)가 일정하다는 가정 하에 불평등지수의 변화가 얼마나 큰지를 계산할 것이다. 이 같은 반사실적 불평등지수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elta^{rew} = \frac{M^{rew,11} - M^{rew,90}}{M^{rew,90}} \quad (6)$$

여기서 ‘rew’는 가중치 조정을 의미한다.

그리고 실제 관찰된 변화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Delta^{act} = \frac{M^{act,11} - M^{act,90}}{M^{act,90}} \quad (7)$$

위 두 식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가중치조정을 통한 가구구조 변화의 소득불평등에 대한 영향을 파악할 수 있게 된다.

$$\frac{\Delta^{act} - \Delta^{rew}}{\Delta^{act}} = \frac{M^{act,11} - M^{rew,11}}{M^{act,11} - M^{act,90}} \quad (8)$$

이 식은 각각의 지수 M의 총변화를 추동하는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력을 보여준다. 만약 2011년의 가중치조정된 반사실적 값이 실제 값과 같다면($M^{act,11} = M^{rew,11}$) 이 값은 0이 된다. 이 경우, 가구구조 변화는 소득불평등 변화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한다. 그리고 다른 극단적인 경우, 즉, 2011년의 가중치조정된 값이 기준년도의 실제 값과 같다면($M^{rew,11} = M^{act,90}$) 이 값은 1이 된다. 따라서 가구구조의 변화가 불

평등지수의 총변화를 전적으로 설명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실제 빈곤율 및 불평등지수의 변화율과 가중치조정 후 빈곤율 및 불평등지수의 변화율을 구하고, 두 변화율의 실제 변화율에 대한 비율을 다시 구했다.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빈곤, 불평등 지수에 따라 가구구조 변화의 영향력이 각기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1990년과 2011년의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실제 상대적 빈곤율의 변화율은 79.4%이고, 가중치 조정 상대적 빈곤율 변화율은 35.2%로, 가구구조 변화가 상대적 빈곤율 변화의 55.6%를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가구구조 변화가 빈곤율 변화의 50.8%를 설명하고 있다. 가구구조 변화가 부유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는 시장소득 33.3%, 가처분소득 40.5%로 나타나 빈곤율에 비해 가구구조 변화가 부유율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약한 것을 알 수 있다.

지니계수로 불평등 변화를 살펴보면,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가구구조 변화가 불평등 변화의 49.2% 설명하고 있고, 가처분소득으로는 55.6%를 설명해주고 있다. GE(0)으로 보면 시장소득으로는 전체 불평등 변화의 31.8%를 설명하고, 가처분소득으로는 49.6%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¹⁶⁾.

OECD(2008)에 따르면 OECD 국가의 지니계수의 실제변화의 88.2%가 인구구조변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Pecil et al.(2010)은 독일의 가구구조 변화의 몫을 12.8%로 분석하고 있다. 이들 결과와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 가구구조의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OECD보다는 크지 않지만 독일보다는 큰 것으로 볼 수 있다.

16) 소득 기준을 시장소득으로 할 경우와 경상소득으로 할 경우 지수별로 공통적인 움직임을 발견할 수는 없다. 경상소득으로 할 때 빈곤율과 GE지수는 영향력이 확대되었지만 지니계수는 영향력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결과로부터 정부의 재정정책이 어떤 패턴을 가지고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논의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표 4-3〉 가중치조정에 의한 불평등지수 변화의 효과(변화율)

(단위: %)

지수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Δ^{act}	Δ^{rew}	$\frac{\Delta^{act} - \Delta^{rew}}{\Delta^{act}}$	Δ^{act}	Δ^{rew}	$\frac{\Delta^{act} - \Delta^{rew}}{\Delta^{act}}$
빈곤율	79.4	35.2	55.6	61.0	30.0	50.8
부유율	24.4	16.3	33.3	23.3	13.8	40.5
I_{Gini}	17.8	9.0	49.2	12.9	5.7	55.6
$I_{G.E(0)}$	81.3	55.4	31.8	35.3	17.8	49.6
$I_{G.E(1)}$	35.3	17.8	49.6	23.9	9.4	60.5
$I_{G.E(2)}$	27.8	13.1	52.7	17.9	6.0	66.4

주 1: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부유율은 중위소득 150% 초과 인구비율

2: Δ^{act} 는 실제 변화율, Δ^{rew} 는 반사실적 변화율 각각 의미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제2절 가구규모 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

1. 방법론: 불평등 분해방법

소득불평등을 인구하위집단별로 분해하는 방법은 Shorrocks(1980), Mookherjee and Shorrocks(1982), Shorrocks(1984)가 제시한 방법론을 따른 것이다. 이 방법을 사용한 실증연구로는 영국을 대상으로 한 Jenkins(1995)와 미국을 대상으로 한 Martin(2006), 그리고 독일을 대상으로 한 Peichl, et al.(2010)이 있다. Peichl, et al.(2010)은 독일의 소득격차의 확대는 부분적으로 가구구조 변화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가중치조정방법과 불평등 분해방법을 통해서 밝혀내었다. 이에 따르면 독일의 경우 가구구조 변화는 세전소득에 대해서는 43%의 영향을, 세후소득에 대해서는 15%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평등 분해방법은 선택된 불평등지수의 특성에 따라 다양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따라서 불평등 분해방법에 적합한 불평등지수를 선택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불평등을 측정하는 지수에는 지니계수를 비롯해 앳킨슨지수, 엔트로피지수, 일반화 엔트로피 지수, 변이계수제곱(CV^2) 등이 있다. 각 지수들마다 상이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적합한 지수를 선택할 필요가 있다. 본 고에서는 가구구조가 소득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서 인구하위집단 및 소득원천별로 분해가 가능한 일반화 엔트로피(GE: Generalized Entropy) 지수를 선택했다. GE지수는 집단 내 불평등과 집단 간 불평등으로 분해가 가능한 뿐만 아니라 지니계수와 같이 소득원천별로도 분해가 가능한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Cowell, 1995; 여유진 외, 2005) 본 연구의 목적에 가장 적합한 불평등 지수라 할 수 있다. GE지수는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begin{aligned}
I_c = & \frac{1}{c(c-1)} \sum_{i=1}^n \frac{w_i}{\sum_{i=1}^n w_i} \left[\left(\frac{y_i}{\bar{y}} \right)^c - 1 \right] \text{ for } -\infty < c < +\infty, c \neq 0, 1, \quad (9) \\
& \sum_{i=1}^n \frac{w_i}{\sum_{i=1}^n w_i} \ln \left(\frac{y_i}{\bar{y}} \right) \text{ for } c = 0, \\
& \sum_{i=1}^n \frac{w_i}{\sum_{i=1}^n w_i} \frac{y_i}{\bar{y}} \ln \left(\frac{y_i}{\bar{y}} \right) \text{ for } c = 1.
\end{aligned}$$

여기서 계수 c 는 소득계층에 대한 가중치로 c 가 작을수록 낮은 소득 계층의 소득변화를 더욱 민감하게 포착한다(Atkinson and Bourghignon, 2000). 여기서는 저소득층 소득변화를 보다 강조하기 위해 $c=0$ 을 선택하기로 한다.

총인구를 K 개의 인구하위집단으로 나누면, $k \in \{1, \dots, K\}$, 불평등지수 I_0 는 다음과 같이 분해될 수 있다.

$$\begin{aligned}
I_0 &= \sum_{k=1}^K \frac{\sum_{i \in k} w_i}{\sum_{i=1}^n w_i} I_{0k} + \sum_{k=1}^K \frac{\sum_{i \in k} w_i}{\sum_{i=1}^n w_i} \ln \left(\frac{\bar{y}}{y_k} \right) \\
(10) \quad &= \underbrace{\sum_{k=1}^K v_k I_{0k}}_{\text{(Within)}} + \underbrace{\sum_{k=1}^K v_k \ln \left(\frac{\bar{y}}{y_k} \right)}_{\text{(Between)}}, \quad (11)
\end{aligned}$$

여기서, $\sum_{i \in k} w_i$ 는 가중치를, v_k 는 하위집단 k 의 비중을, 그리고 $\bar{y}_k$ 는 하위집단 k 의 평균소득을 각각 뜻한다. 따라서 하위집단의 불평등은

$I_{0k} = \sum_{i \in k} (w_i / \sum_{i \in k} w_i) \ln(\bar{y}_k / y_i)$ 이 된다. 따라서 총불평등은 집단 내(within) 불평등(W)과 집단 간(between) 불평등(B)의 합으로 정의될 수 있다.

위 식을 차분해서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불평등의 동태적 분해식이 만들어진다(Mookherjee and Shorrocks, 1982).

$$\begin{aligned}
 \Delta I_0 = I_0^{t+1} - I_0^t &\approx \underbrace{\sum_{k=1}^K \bar{v}_k \cdot \Delta I_{0k}}_{(A)} + \underbrace{\sum_{k=1}^K \bar{I}_{0k} \cdot \Delta v_k}_{(B)} \\
 &+ \underbrace{\sum_{k=1}^K [\bar{\lambda}_k - \ln(\bar{\lambda}_k)] \cdot \Delta v_k}_{(C)} + \underbrace{\sum_{k=1}^K (\bar{\theta}_k - \bar{v}_k) \cdot \Delta \ln(\bar{y}_k)}_{(D)},
 \end{aligned}
 \tag{12}$$

여기서 $\lambda_k = \hat{y}_k / \bar{y}$ 는 총인구 평균소득에 대한 집단 k의 평균소득의 비율을, $\theta_k = v_k \lambda_k$ 는 집단 k의 소득비율($\because v_k =$ 인구비율)을 각각 뜻한다. $\bar{\lambda}$ (bar)로 표시된 것은 두 기간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동태적 불평등은 A, B, C, D로 분해가 가능하다.

먼저 A항은 인구하위집단 내(within) 불평등 변화(ΔI_{0k})의 효과를 요약해준다. 인구구성비를 평균값으로 고정($\bar{v}_k$)시킨 상태에서 인구구성의 변화로부터 도출되기 때문에 온전히 인구하위집단 내의 변화에서 야기되는 불평등 변화의 기여분을 나타내 준다. 따라서 전체인구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내의 불평등 변화는 상대적으로 작은 비중을 차지하는 집단 내 불평등의 변화보다 더욱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B항은 인구구성변화(Δv_k)가 인구하위집단 내(within)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를 나타내준다. 인구비율의 변화가 B항의 결정적 요소이므로 집단 내 불평등을 평균값으로 고정($\bar{I}_{0k}$)시킨 상태에서 집단 내 불평등의

변화로 산출된다. 따라서, 예컨대, 상대적으로 불평등수준이 높은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면, 전체적인 불평등도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C항은 인구구성변화(Δv_k)가 인구하위집단 간(between)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해준다. 총평균소득 대비 집단평균소득의 비율(λ_k)을 고정시킨 상태에서 인구구성비의 변화가 불평등 변화의 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따라서 총평균소득 대비 상대적으로 높거나 낮은 평균소득을 가진 집단의 비율이 증가하거나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총불평등의 변화에 대한 기여분의 합을 나타내준다.

D항은 인구하위집단 평균소득의 변화($\Delta \ln(\bar{y}_k)$)의 기여분을 나타내준다. 총소득대비 인구하위집단소득비율과 총인구 대비 하위집단인구비율의 차는 각각 고정($\bar{\theta}_k - \bar{v}_k$)한 상태에서 인구하위집단 평균소득의 로그 변화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한 집단의 인구대비 비율에 비해 그 집단의 소득비율이 클수록 이 집단의 평균소득 변화가 총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지게 된다.

인구하위집단 비중 변화에 반응하는 B항과 C항은 인구변화가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데 활용될 수 있어,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2. 기초통계량

다양한 가구규모와 가구유형을 고려하기 위해 인구하위집단을 아래 〈표 4-4〉와 같이 13개 집단으로 구분하였다¹⁷⁾. 15세 이상을 성인가구원으로 하고, 14세 이하를 아동가구원으로 구분하였다. 이렇게 구분한 가장 큰 이유는 해외 선행연구(Peichl et al., 2010)와 비교를 하기 위해

17) 『가계동향조사』의 경우 2006년 이전에는 1인 가구가 조사되지 않아 성인 1인 가구를 제외한 13개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서다. 그리고 15세는 생산가능인구(15~64세)의 기준 연령이기도 하다. 집단 1~3은 성인이 1명인 가구를, 집단 4는 무자녀 부부가구를, 집단 5~9는 유자녀 부부가구를, 집단 10~13은 3세대 이상 가구를 각각 대표한다 할 수 있다.

1990년에서 2011년 까지 구성비의 변화를 보면 성인 2인 가구(집단 4)의 비중이 가장 크게 증가(9.9%에서 27.1%로 17.2% 포인트)했고, 성인 3인 가구(집단 8)의 비중이 두 번째로 크게 증가(6.9%에서 17.5%로 10.6% 포인트)했다. 총 가구 중에서 이들 두 집단의 비중이 약 45%를 차지하게 되었다. 한편, 성인 3인 이상과 아동 1인으로 구성된 가구(유형 9)이 가장 크게 감소(21.4%에서 9.8%로 10.9% 포인트)했고, 다음으로 성인 2인과 아동 1인으로 구성된 가구(유형 5)가 두 번째로 감소폭이 컸다(14.5%에서 8.9%로 5.9% 포인트). 지금까지 표준가구 유형인 성인 2인과 아동 2인으로 구성된 가구(유형 6)의 경우는 4.7% 포인트 감소했다.

이 같은 가구구성 변화에 따라 2011년에는 성인 2인으로만 구성된 가구(유형 4)가 27.1%를 차지해 최빈가구로 등장했고, 성인 3인 가구(유형 8)이 17.5%로 두 번째 많은 가구가 되었다. 표준가구의 경우는 3번째 순위로 밀려났다.

2011년에 비중이 큰 주요 가구유형의 월 평균 시장소득 변화를 살펴보면, 먼저 ‘유형 4’의 경우 1990년 434천원에서 1,213천원이 증가했고, ‘유형 8’의 경우는 510천원에서 1,654천원이 증가했다. 한편, ‘유형 6’의 경우는 422천원에서 1,630천원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폭이 큰 유형은 1,829천원이 증가한 ‘유형 12’이고, 가장 증가폭이 작은 유형은 718천원 증가에 그친 ‘유형 3’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월 평균 가처분소득의 변화를 살펴보면 ‘유형 4’의 경우 1990년 430천원에서 1,249천원이 증가했고, ‘유형 8’의 경우는 504천

원에서 1,559천원이 증가했다. 한편, ‘유형 6’의 경우는 407천원에서 1,455천원이 증가했다. 가장 증가폭이 큰 유형은 1,702천원이 증가한 ‘유형 12’이고, 가장 증가폭이 작은 유형은 671천원 증가에 그친 ‘유형 3’으로 나타났다.

〈표 4-4〉 가구구성별 인구비중과 평균소득 변화: 1990-2011

(단위: %, %p, 천원)

집단 (k)	성 인	아 동	$v_{k, 90}$	$v_{k, 11}$	Δv_k	시장소득		가처분소득	
						$\bar{y}_{k, 90}$	$\Delta \bar{y}_k$	$\bar{y}_{k, 90}$	$\Delta \bar{y}_k$
1	1	1	0.6	1.0	0.5	383	1,127	379	1,107
2	1	2	0.7	1.2	0.2	309	1,221	306	1,230
3	1	≥3	0.0	0.2	0.2	382	718	400	671
4	2	0	9.9	27.1	18.0	434	1,213	430	1,249
5	2	1	14.5	8.9	-5.9	409	1,768	397	1,590
6	2	2	18.8	14.1	-4.7	422	1,630	407	1,455
7	2	≥3	0.5	1.5	1.0	318	1,456	307	1,336
8	3	0	6.9	17.5	10.2	510	1,654	504	1,559
9	≥3	1	21.4	9.8	-10.9	459	1,590	443	1,463
10	≥3	2	10.9	3.3	-7.8	424	1,474	409	1,380
11	≥3	≥3	0.6	0.3	-0.4	357	1,173	342	1,111
12	4	0	7.9	13.5	5.3	525	1,829	505	1,702
13	≥5	0	7.4	1.6	-5.6	531	1,721	511	1,590
전체	-	-	100.0	100.0	-	-	-	-	-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3. 분석결과

인구하위집단별 불평등 정도의 변화는 아래 〈표 4-5〉와 같다.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서 지니계수와 GE(0)의 변화를 같이 제시했다. 먼저, 시장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변화를 보면, ‘유형 1’, ‘유형 3’, ‘유형 11’, ‘유형 12’에서 감소했고, 나머지 유형들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한편, 시장소득 기준 GE(0)의 변화를 보면 ‘유형 1’이 지니계수와 달리

증가한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유형들은 같은 패턴을 보인다.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의 경우는 시장소득 기준과 달리 감소한 유형이 더 많은 특징을 보인다. 그러나 GE(0)의 경우는 증가한 유형이 더 많지만 시장소득 기준에 비해서는 증가한 유형이 감소했다.

이처럼 기준 소득에 따라, 그리고 불평등 지수에 따라 유형별 증감의 양태가 달리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소득기준별로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은 조세-이전 체계를 통한 정부의 역할의 효과가 가구 유형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할 수 있다. 지수별로 상이한 결과는 지수의 특성에 따라, 즉 지수가 민감하게 포착하는 소득계층이 어떠한가에 따라 야기될 수 있는 문제로 생각된다.

그러나 소득이나 지수에 상관없이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유형은 분명히 드러난다. 2011년에 비중이 10%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이고, 1990년에 비해 증감폭이 5% 포인트에 육박하거나 그 이상인 인구유형이 여기에 해당된다(아래 표에서 음영표시된 부분). 구체적으로 ‘유형 4~6’과 ‘유형 8~9’의 경우는 불평등도가 증가했고, ‘유형 12’의 경우는 불평등도가 감소했다. 단, 예외적으로 ‘유형 8’의 경우 가처분소득 기준으로 지니계수는 감소했지만 GE(0)는 증가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이들 유형들 중 ‘유형 5,6,9’은 인구비중이 감소하면서 불평등도가 증가했다. 이것은 이들 유형의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보다 낮은 것에 기인한다 할 수 있다. 즉 소득분배 상태가 보다 균등한 집단의 비중이 줄어들면서 전체적인 불평등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형 4,8’은 인구비중이 증가하면서 불평등도가 감소했다. 이것은 이들 유형의 불평등도가 전체 불평등도에 비해 높은 것과 관련이 된다. 즉 소득분배 상태가 불균등한 집단이 늘어나면서 전체적인 불평등도 증가에 기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유형 12’는 인구비중이 증가했지만 불평등도는 감소했다. 이것은 불평등도가 낮아진 집단의 비중이 증가하면서 전체적인 불평등도 증가를 억제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표 4-5〉 인구하위집단별 불평등지수 변화

집단	시장소득					
	지니계수			GE(0)		
	1990	2011	증감	1990	2011	증감
1	0.371	0.365	-	0.237	0.439	+
2	0.343	0.361	+	0.256	0.447	+
3	0.667	0.365	-	1.307	0.251	-
4	0.321	0.430	+	0.200	0.466	+
5	0.234	0.288	+	0.095	0.211	+
6	0.233	0.255	+	0.093	0.122	+
7	0.232	0.248	+	0.083	0.111	+
8	0.310	0.315	+	0.174	0.205	+
9	0.258	0.273	+	0.112	0.139	+
10	0.255	0.265	+	0.107	0.238	+
11	0.288	0.252	-	0.137	0.106	-
12	0.284	0.258	-	0.141	0.124	-
13	0.257	0.299	+	0.112	0.194	+
전체	0.266	0.308	+	0.122	0.222	+
집단	가처분소득					
	지니계수			GE(0)		
	1990	2011	증감	1990	2011	증감
1	0.365	0.343	-	0.228	0.210	-
2	0.342	0.312	-	0.246	0.181	-
3	0.622	0.356	-	0.956	0.238	-
4	0.305	0.379	+	0.173	0.281	+
5	0.229	0.270	+	0.092	0.129	+
6	0.227	0.247	+	0.089	0.111	+
7	0.225	0.238	+	0.078	0.097	+
8	0.292	0.290	-	0.150	0.154	+
9	0.250	0.261	+	0.106	0.124	+
10	0.245	0.239	-	0.097	0.095	-
11	0.279	0.241	-	0.128	0.097	-
12	0.264	0.244	-	0.123	0.106	-
13	0.242	0.276	+	0.100	0.133	+
전체	0.256	0.286	+	0.112	0.154	+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다음으로 정태적 분해결과를 보면 아래 <표 4-6> 과 같다. 시장소득 기준 불평등지수는 1990년 0.122인데, 전체 불평등의 95.9%가 인구하위집단내의 불평등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4.1%는 인구하위집단간의 불평등으로 설명이 된다. 2011년의 경우 전체 불평등도 0.221의 96.7%가 인구하위집단내의 불평등에 의해 설명되고, 나머지 3.3%가 인구하위집단간의 불평등에 의해 설명이 된다. 전체 불평등도에 대해 인구하위집단내의 불평등의 영향력이 더욱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1990년의 가구 구성비를 적용한 2011년의 반사실적 소득분포의 경우 불평등도는 0.208로 나타나 가구구조의 변화가 없었으면 실제보다 불평등도는 완화될 수 있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인구하위집단내 불평등의 영향력이 97.5%, 인구하위집단간 불평등의 영향력이 2.5%로 각각 나타나 실제보다 인구하위집단내 불평등도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을 알 수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이와 같은 패턴은 그대로 유지된다.

<표 4-6> 집단 내 - 집단 간 불평등지수의 분해

(단위: %)

구분		전체	집단내	(비중)	집단간	(비중)
시장 소득	GE(0) 1990 act	0.122	0.117	(95.9)	0.005	(4.1)
	GE(0) 2011 act	0.221	0.214	(96.7)	0.007	(3.3)
	GE(0) 2011 rew	0.208	0.203	(97.5)	0.005	(2.5)
가처분 소득	GE(0) 1990 act	0.112	0.107	(95.6)	0.005	(4.4)
	GE(0) 2011 act	0.154	0.149	(96.8)	0.005	(3.3)
	GE(0) 2011 rew	0.141	0.137	(97.1)	0.003	(2.9)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위의 식(12)에 따른 동태적인 불평등 분해 결과는 아래 <표 4-7> 과 같다. A_k B_k C_k D_k 는 동태적 요인분해에 따른 각각의 요소들이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를 보여준다. A_k 는 인구하위집단 불평등

변화의 순효과를, B_k 는 인구구성변화가 인구하위집단 내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C_k 는 인구구성변화가 인구하위집단 간 불평등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D_k 는 인구하위집단 평균소득의 상대적 변화의 효과를 각각 의미한다. 이 중에서 인구하위집단 구성의 변화를 반영하는 요소는 B_k 와 C_k 이다. 따라서 가구구조변화가 전체 불평등도에 미치는 영향은 이 두 요소가 전체 불평등 변화에 미치는 영향으로 파악할 수 있다.

먼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인구하위집단 구성비의 변화(B_k 와 C_k)의 영향력이 가장 큰 집단은 성인 3인으로만 구성된 ‘유형 8’이다. 그리고 성인 2인과 아동 3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형 7’과 성인 2인으로만 구성된 ‘유형 4’의 순으로 뒤를 잇는다. 이들 유형 중 ‘유형 8’과 ‘유형 4’의 공통점은 아동이 없고 성인으로만 구성된 가구라는 점이다. 그리고 이들 가구는 기준년도와 비교년도 모두 전체 불평등도에 비해 높은 불평등도를 보이면서 불평등도가 더욱 증가한 유형이라는 공통점도 가진다. 그리고 전체 유형중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는 유형들이라는 점도 공통점이다. 따라서 이 같은 결과로부터 불평등도가 높은 아동이 없는, 성인으로만 구성된 2인, 3인 가구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면서 전체 불평등도의 심화를 주동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한편, 성인 4인 이상으로 구성된 ‘유형 12’와 성인 3인 이상과 아동 1인으로 구성된 ‘유형 9’은 상대적인 비중의 변화가 전체적인 불평등도 확대를 억제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유형 12’의 경우는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아지면서, 불평등도가 전체보다 낮아지는 변화를 경험한 가구유형이다. ‘유형 9’는 전체가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지면서, 불평등도가 증가했지만 전체 불평등도에 비해서는 낮은 가구유형이다. 따라서 이들의 가구 구성비는 다른 방향으로 변했지만 불평등도의 변화에 따라 전체 불평등도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성인 2인과 아동 1인으로 구성된 ‘유형 5’와 성인 2인과 아동

2인으로 구성된 ‘유형 6’은 전형적인 표준가구의 구성이라 할 수 있다. 이들 가구의 전체적인 불평등도는 전체 불평등도에 비해 낮고, 그 비중이 감소했다. 두 유형 모두 기준년도에 비해 불평등도가 증가하기는 했지만 전체적으로 불평등도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즉, 성인과 아동으로 구성된 표준가구 유형의 불평등도는 전체 불평등도에 비해 낮은 수준에서 증가하기는 했지만 가구 구성비가 감소하면서 전체적인 불평등도 확대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시 말해 불평등 확대효과가 가구구성비 감소효과로 상쇄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보다 엄밀한 분석이 필요하겠지만, 이들 유형의 경우 가구주가 근로연령에 속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다른 유형의 가구들에 비해 소득수준이 전체적으로 높아 전체적으로 빈곤율이나 불평등지수를 개선시키는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가구유형이 점점 감소하게 되면 우리나라 전체적인 빈곤과 소득분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가처분소득을 기준으로 볼 때도 전체적으로 절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유형별 패턴은 시장소득 기준과 크게 다르지 않다.

〈표 4-7〉 1990-2011년 인구집단별 엔트로피 분해 결과

(단위: %p,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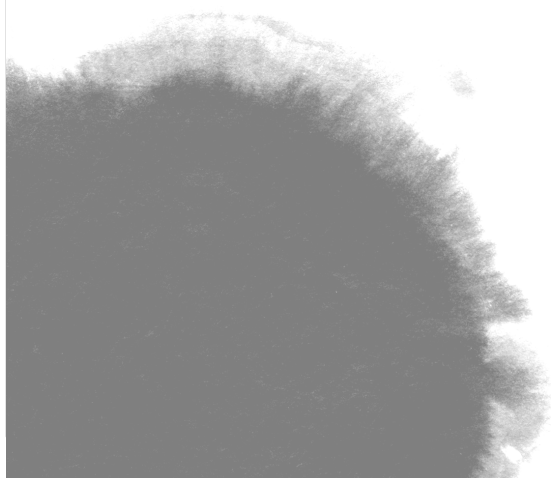
소득	집 단 (k)	성인	아동	A_k	B_k	C_k	D_k	$\frac{B_k + C_k}{\Delta I_0}$
시장 소득	1	1	1	0.001	0.001	0.003	-0.002047	2.1
	2	1	2	0.002	0.002	0.006	-0.004636	4.1
	3	1	≥3	-0.001	0.001	0.002	-0.000907	-0.3
	4	2	0	0.028	0.038	0.114	-0.034882	57.2
	5	2	1	0.011	-0.004	-0.028	-0.005377	-27.7
	6	2	2	0.005	-0.002	-0.015	-0.012334	-58.6
	7	2	≥3	0.000	0.002	0.017	-0.005355	66.5
	8	3	0	0.003	0.021	0.109	0.017176	408.3
	9	≥3	1	0.005	-0.015	-0.118	0.004558	-506.6
	10	≥3	2	0.013	-0.017	-0.098	-0.013942	-87.6
	11	≥3	≥3	0.000	-0.001	-0.005	-0.003744	16.9
	12	4	0	-0.002	0.012	0.089	0.040291	-596.1
	13	≥5	0	0.005	-0.011	-0.074	0.021150	-103.3
가처분 소득	1	1	1	0.000	0.001	0.003	-0.001807	-21.3
	2	1	2	-0.001	0.001	0.006	-0.003980	-10.7
	3	1	≥3	-0.001	0.001	0.002	-0.000855	-0.4
	4	2	0	0.012	0.026	0.116	-0.022911	132.3
	5	2	1	0.004	-0.003	-0.028	-0.007982	-82.4
	6	2	2	0.004	-0.002	-0.015	-0.019932	-74.6
	7	2	≥3	0.000	0.001	0.017	-0.005745	99.8
	8	3	0	0.000	0.016	0.109	0.020204	2,715.6
	9	≥3	1	0.003	-0.014	-0.119	0.002261	-731.3
	10	≥3	2	0.000	-0.009	-0.098	-0.014274	5,206.9
	11	≥3	≥3	0.000	-0.001	-0.005	-0.003785	16.9
	12	4	0	-0.002	0.010	0.088	0.038492	-580.6
	13	≥5	0	0.002	-0.009	-0.074	0.020122	-250.6

주: 2인 이상 도시가구 기준

자료: 통계청, 「가계동향조사」 원자료

5장

결론 및 정책함의





제5장 결론

제1 절 결과 요약

1990년과 2011년 사이에 우리나라는 표준가구 유형인 4인 가구를 대표로 하는 다인가구의 비중이 작아지는 반면, 2인가구를 중심으로 한 소인가구의 비중이 커지는 방향으로 가구구성이 변화했다. 이 같은 변화 속에서도 아동이 없는 가구와 노인가구의 비중이 크게 확대되는 특징을 보였다.

본 연구의 목적은 이 같은 가구구성의 변화가 우리나라 소득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계량해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가계동향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가중치조정 방법을 통해 가구구성의 변화가 전체 소득불평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고, 엔트로피 분해방법을 이용해서 어떠한 가구구성이 전체 소득불평등 변화를 주도하는지를 확인해보았다. 그리고 재정정책이 작동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를 비교해보기 위해 시장소득과 경상소득을 기준으로 효과를 비교해보았다.

가중치조정 방법을 통해서 가구구성의 변화가 없었다면 빈곤 및 불평등지수는 실제 지수보다 낮았을 것으로 분석되었다. 가구구성 변화가 불평등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지니계수로 측정할 경우 49.2%(시장소득)로, GE(0)로 측정할 경우 31.8%(시장소득)로 각각 나타났다. 물론, 이 같은 결과는 다른 요인들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구구성 변화 요

인을 살펴본 것이므로 과대추정의 위험을 내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절대적인 영향력의 크기는 달라질 수 있겠지만 가구구성의 변화가 불평등도 확대에 기여하는지 여부를 판정하는 데는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다.

불평등의 동태적 요인분해 방법을 통해서서는 다음의 몇 가지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첫째, 기준소득이나 불평등 지수의 선택과 무관하게 가구비중의 증감과 불평등도의 증감이 일관적으로 발견되는 가구유형들이 있었다. 성인 2인으로만 구성되는 가구(유형 4)와 성인 3인으로만 구성되는 가구(유형 8)는 구성비가 크게 증가하면서 불평등도도 같이 증가했다. 성인 3인 이상과 아동 1인으로 구성된 가구(유형 9)는 구성비가 크게 감소하면서 불평등도가 증가했다. 성인 4인 이상으로 구성된 가구(유형 12)는 인구비중이 증가했지만 불평등도는 감소했다.

둘째, 정태적 분해결과 가구유형으로 구분한 인구하위집단의 집단 내 불평등도(95% 이상)가 집단 간 불평등도에 비해 전체 불평등도에 대한 영향력이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2011년의 반사실적 가구구성에서 집단 내 불평등의 영향력이 더욱 큰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가구구성의 변화가 집단 내 불평등의 영향력을 축소시키는 작용을 했을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했다.

셋째, 동태적 요인분해를 통해 ①전체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불평등도가 더욱 증가한 아동이 없는 2인 가구(유형 4)와 3인 가구(유형 8)의 경우 구성비가 커지면서 전체적인 불평등도를 심화시키는데 기여를 했고, ②표준가구라 할 수 있는 성인 2인과 아동 1인 가구(유형 5), 성인 2인과 아동 2인 가구(유형 6)의 경우는 구성비가 작아지면서 전체적인 불평등도 심화를 억제하는데 기여를 했다는 사실을 각각 확인할 수 있었다.

제2절 정책적 시사점과 한계

이상의 결과로부터 도출할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조세·이전을 통한 사후적이고 직접적인 소득재분배 정책은 인구 및 가족정책과 같은 여타의 사회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는 소득재분배 정책의 관점과 인구 및 가족정책의 관점에서 각각 시사하는 바가 있다.

먼저, 소득재분배 정책의 관점이다. 가구유형 내의 소득불평등도가 전체의 소득불평등도를 거의 전적으로 설명한다는 결과로부터 구성비의 변화가 크거나 현재 구성비가 큰 유형의 가구들에서의 소득재분배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없는 소규모의 가구유형의 확대가 불평등 악화를 주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가구에 대한 정책적 집중이 필요하다. 보다 면밀히 분석을 해야 되겠지만, 노인가구가 이들 가구를 주로 구성한다는 것을 전제한다면 소득재분배 정책에 있어서도 노인가구를 주요한 정책 대상으로 할 필요가 있다. OECD의 최고수준인 노인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이 고민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정책은 노인빈곤뿐만 아니라 전체 불평등도를 줄일 수 있는 유용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기초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과 재산의 소득환산제로 인해 수급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 노인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그리고 현행 기초노령연금도 노인빈곤과 소득불평등 문제를 해소하는데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편논의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인구 및 가족정책의 관점이다. 본 연구에 의해 소득불평등도를 확대시키는 유형으로 지목된 가구유형들의 소득불평등도 완화와 더불어 이른바 ‘분배지향적 가구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인구 및 가족정책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아동이 없는 소규모 가구의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에 기여하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출산과 양육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의 정책을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는 출산율 제고 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겠지만 소득재분배의 관점에서 인구정책을 조망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이처럼 인구정책뿐만 아니라 여타의 사회정책 수립에 있어서도 소위 ‘저출산 인지적’ 관점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2인 가구 등 소규모 가구의 비중 확대가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고, 대규모 가구의 비중확대가 소득불평등 심화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가구규모 확대가 중요한 정책과제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가구규모의 소규모화 경향을 반전시킬 수 있는 정책수단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소비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도록 소득과 소비를 공유할 수 있는 ‘그룹홈’과 같은 대안적 가족제도도 하나의 방안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닌다. 첫째는 자료의 한계로 인해 1인 가구를 포함시키지 못했다는 것이다. 노인 1인 가구의 증가와 이들 가구의 빈곤 심화는 어찌 보면 빈곤과 소득불평등을 악화시키는 가장 큰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와 동일한 방법이 사용된 Peichl et al.(2010)은 독일의 경우 1인 가구의 확대가 소득불평등 확대를 설명하는 가장 큰 인구구조 변화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두 번째 한계는 본문에서도 지적했듯이 가중치조정 방법에 있어서 가구주 학력, 성, 연령 등 여타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석을 했다는 점이다. 향후 연구에서 보다 엄밀한 분석을 시도해 볼 것이다.

참고문헌

- 강종구·박창귀·조운제(2012) 「국가별 패널자료를 이용한 소득불균등 확대의 원인 분석」, 『經濟分析』 제18권 제1호, 한국은행 경제연구원
- 김용성(2005) 빈곤실태 분석을 위한 거시통합모형 개발_인구 및 가구구조와 교육수준의 변화가 소득불평등도에 미치는 효과 분석. KDI
- 김진욱, 정의철(2010) 도시 가구의 소득원천별 분해를 통한 소득불평등 변화요인 분석: 가구주 연령을 중심으로
- 김학주(2006) 노인가구 대 비노인가구의 소비불평등에 관한 연구
- 석상훈(2010) 인구구조의 고령화와 소비격차
- 성명재, 박기백(2009) 인구구조 변화가 소득분배에 미치는 영향. 경제학연구. 제57집 제4호. 한국경제학회.
- 신광영(2009) 세대, 계급과 불평등
- 신광영(2009) 현대 한국 불평등 구조의 변화: 민주화 세계화와 새로운 사회적 위험
- 여유진 외(2005), 빈곤과 불평등의 동향 및 요인 분해. 연구보고서 2005-11.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여유진 외(2007), 교육불평등과 빈곤의 대물림. 연구보고서 2007-09.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원종학, 성명재(2007) 소득분배 격차 확대의 원인과 정책대응 방향
- 임병인, 전승훈(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6회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pp.421-436.

정진호, 최강식(2001) 노동자 가구소득 불평등의 요인별 분해
통계청 · 금융감독원 · 한국은행, 2010년 가계금융조사 결과

Atkinson, A. B., and F. Bourguignon(2000), Handbook of Income Distribution, Volume 1, Handbooks in Economics 16, Amsterdam

Almas, Havnes, Mogstad(2011) "Baby booming inequality? Demographic change and earnings inequality in Norway, 1967-2000" J Econ Inequal

Bover, O.(2008) "Wealth Inequality and Household Structure: US VS. Spain," Documentos de Trabajo No.0804

Corak, M.(2012) "Inequality from Generation to Generation: The United States in Comparison," in Robert Rycroft (editor), The Economics of Inequality, Poverty, and Discrimination in the 21st Century, ABC-CLIO, forthcoming.

Cowell, F.A.(1995) *Measuring Inequality* (2nd ed.). Hemel Hempstead: Harvester Wheatsheaf.

Deaton and Paxson(1998) Aging and Inequality in Income and Health

Di Nardo, J., N. M. Fortin, and T. Lemieux(1996) "Labor Market Institutions and the Distribution of Wages, 1973 --1992: A Semiparametric Approach," *Econometrica*, 64(5), 1001 - 1044.

Krueger, A(2012) "The Rise and Consequences of Inequality in the United States", speech at the Center for American Progress on January 2012

Lemieux, T.(2006) "Increasing Residual Wage Inequality: Composition Effects, Noisy Data, or Rising Demand for Skill?," *American Economic Review*, 96(3), 461-498

- OECD(2008) Growing Unequal? Income Distribution and Poverty in OECD Countries
- OECD(2011) Devided We Stand - Why Income Inequality Keeps Rising? Country Note-Korea
- OECD(2012) OECD Economic Surveys Korea
- Ohtake, F. (2003) ‘Did income inequality rise?’, in Higuchi, Y. and Ministry of Finance, Policy Research Institute (ed.) *Income Inequality and Social Stratum in Japan*, Nihon Hyoronsha, Tokyo (in Japanese).
- Ohtake, F. (2005) Inequality in Japan, Nihon Keizai Shinbunsha, Tokyo (in Japanese).
- Ohtake, F. and M. Saito(1998) "Population Aging and Consumption Inequality in Japan," Review of Income and Wealth, 44(3)
- Peichl, Pestel, and Schneider, 2010, "Size Matters: The Impact of Changes in Household Structure on Income Distribution in Germany".
- Rodrik, D.(2006) Industrial Development: Stylized Facts and Policies. *Industrial Development for the 21th Centrury*. U.N.-DESA.
- Sinn. H.W, and S. Uebelmesser(2002) "Pension and the path to gerontocracy in Germany", European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19. pp. 153-158
- Tachibanaki, T. (1998) Economic Equality in Japan, Iwanami Shinsho, Tokyo (in Japanese).
- Uni, H.(2008a) Increasing waage inequality in japan since end of the 1990s: an institutional explanation
- Uni, H.(2008b) ‘Causes of an increase in wage differentials in Japan’, Political Economy Quarterly, 45 (1): pp. 20-30 (in Japanese).

Wan(2004) Accounting for income inequality in rural China: a regression-based approach
Wan(2004) Accounting for income inequality in rural China: a regression-based approach

Zhong, H.(2011) The impact of population aging on income inequality in developing countries: Evidence from rural China, China Economic Review, 22(1), pp.98-107.

간행물회원제 안내

▶ 회원에 대한 특전

- 본 연구원이 발행하는 판매용 보고서는 물론 「보건복지포럼」, 「보건사회연구」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며 일반 서점에서 구입할 수 없는 비매용 간행물은 실비로 제공합니다.
- 가입기간 중 회비가 인상되는 경우라도 추가 부담이 없습니다.

▶ 회비

- 전체간행물회원 : 120,000원
- 보건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사회분야 간행물회원 : 75,000원

▶ 가입방법

- 홈페이지 - 발간자료 - 간행물회원등록을 통해 가입
- 유선 및 이메일을 통해 가입

▶ 회비납부

- 신용카드 결제
- 온라인 입금 : 우리은행(019-219956-01-014) 예금주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문의처

- (122-705)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흥로 235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간행물 담당자 (Tel: 02-380-8157)

Kihasa 도서 판매처

- | | |
|---|---|
| ■ 한국경제서적(총판) 737-7498 | ■ 교보문고(광화문점) 1544-1900 |
| ■ 영풍문고(종로점) 399-5600 | ■ 서울문고(종로점) 2198-2307 |
| ■ Yes24 http://www.yes24.com | ■ 알라딘 http://www.aladdin.co.kr |



연구보고서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01	u-Health 현황과 정책과제	송태민
연구 2011-02	보건의료분야 여건변화에 따른 의료기관의 지출 및 수입구조 분석	조재국
연구 2011-03	천서민 건강관리서비스 확충을 위한 건강관리서비스제도 활성화 방안	이상영
연구 2011-04	약제비 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고비용 의약품 관리방안	박실비아
연구 2011-05	식품안전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아젠다 개발 등 추진전략 수립	정기혜
연구 2011-06	소바자 중심의 유기식품의 관리체계 및 개선방안 -유기농식품 표시제 중심으로-	곽노성
연구 2011-07	저소득층 아동비만 및 저체중 문제의 진단과 대응방안	김혜련
연구 2011-08	치료에서 예방으로의 패러다임전환에 따른 건강증진정책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최은진
연구 2011-09	인구집단별 의료이용의 형평성 현황 및 형평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	김동진
연구 2011-10	통일대비 북한 위기상황에 따른 보건복지 대응방안	황나미
연구 2011-11	건강보험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 제고방안	신영석
연구 2011-12	노후준비 실패를 반영한 노후소득보장체계 구축방안: 노후소득보장제도와 관련 복지제도간 연관성을 중심으로	윤석명
연구 2011-13	사회보장재정과 재원조달에 관한 연구	최성은
연구 2011-14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조화적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유근춘
연구 2011-15	장애연금제도 발전방안 연구 -장애·장해·장애인 연금간 효과적인 역할정립 중심으로-	신화연
연구 2011-16-1	선진국의 아동사래관리체계비교연구: 영국, 미국, 뉴질랜드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16-2	호주 사회보장체계 연구	여유진
연구 2011-17-1	정부의 복지재정지출 DB구축방안에 관한 연구(5차년도): 복지수요와 사회복지재정에 관한 연구	고경환
연구 2011-17-2	노인복지서비스 공급방식의 변화와 복지경영 -지방정부를 중심으로-	고경환
연구 2011-17-3	2011 사회예산분석	최성은
연구 2011-17-4	2011 보건복지제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1-17-5	공적연금 재정평가 및 정책현안 분석	윤석명
연구 2011-17-6	사회복지 재정추계 모형개발 연구	원종욱
연구 2011-17-7	건강친화적 재정정책 구축을 위한 연구	정영호
연구 2011-18	공정사회를 위한 천서민정책 개선방안	이태진
연구 2011-19	한국인의 복지의식에 대한 연구: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과제	노대명
연구 2011-20	계층구조 및 사회이동성 연구	여유진
연구 2011-21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패널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저소득층 양적 & 질적 연계 패널조사-	최현수
연구 2011-22	기초생활보장제도 재정평가 및 재정추계 기본모형 개발연구	김태완
연구 2011-23	공공부조 정책 내용과 집행의 상호조응성 분석-TANF의 배경과 그 집행의 특징-	이현주
연구 2011-24	2011 빈곤연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1-25	사회복지제도 운영체계 국제비교 연구: 호주·뉴질랜드·캐나다 영국을 중심으로	강혜규
연구 2011-26	중산층가족의 복지체감도 증진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1-27	다문화가족아동의 사회적응실태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미숙
연구 2011-28	지역별 건강수명의 형평성 분석과 정책과제	변용찬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29	장애노인 서비스 연계방안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0	장애인 복지지표를 통해 살펴 본 OECD 국가의 장애인정책 비교 연구	김성희
연구 2011-31	사회적기업의 사회복지서비스 제공 실태 및 운영 구조 연구	강혜규
연구 2011-32	저출산·고령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파급효과 분석	이삼식
연구 2011-33	건강지표 산출을 위한 보건기관통합정보시스템 활용 및 제고방안	정영철
연구 2011-34	보건복지통계의 품질관리 표준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1-35	사회복지 통계생산 효율화방안 연구	도세록
연구 2011-36	한국의 보건복지동향 2011	장영식
연구 2011-37-1	출산율예측모형개발	이삼식
연구 2011-37-2	저출산에 대한 민간의 영향과 정책과제	김태홍(외부)
연구 2011-37-3	출산관련 행태 변화에 따른 신생아건강 동향과 정책과제	최정수
연구 2011-37-4	소득계층별 출산·양육 행태 분석 및 정책방안	김은정
연구 2011-37-5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책방안	백선희(외부)
연구 2011-37-6	일가정양립정책과 보육정책간 연계방안 연구	이삼식
연구 2011-37-7	자방자치단체 저출산 대책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연구	박종서
연구 2011-37-8	외국의 이민정책 변천과 사회경제적 영향	임정덕(외부)
연구 2011-37-9	베이비 부머의 삶의 다양성에 관한 연구	정경희
연구 2011-37-10	저출산고령화 시대의 노인인력 활용 패러다임 모색: 연금제도와 고령자 경제활동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소정
연구 2011-37-1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형평성 평가	이윤경
연구 2011-37-12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지출 분석 및 정책방안	선우 덕
연구 2011-37-13	예방적 관점에서의 효과적인 노인건강관리서비스의 개발 연구 -M시 종적연구기반(I)	오영희
연구 2011-37-14	고령친화 여가산업 활성화 방안	김수봉
연구 2011-37-15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	오영희
연구 2011-37-16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 분석 -스페인·폴란드 판-	이삼식
연구 2011-37-17	선진국 고령사회 대응정책 동향	정경희
연구 2011-37-18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관련 쟁점연구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사각지대 분석-	이소정
연구 2011-37-19	출산행동의 동향분석을 위한 출산관련 조사자료DB구축	신창우
연구 2011-37-20	결혼이주여성의 성공적 정착과 농촌사회 지속가능한 다문화사회 구축방안 연구	김기홍(외부)
연구 2011-37-21	북한인구의 동태적 및 정태적 특징과 사회경제적 합의	정영철(외부)
연구 2011-37-22	저출산 시대 아동의 안전한 사회 환경 조성방안	이미정(외부)
연구 2011-3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2006-2010년 결과 보고서-	오영호
연구 2011-39-1	건강영향평가의 제도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1-39-2	건강도시산업의 건강영향평가 및 기술지원	김동진
연구 2011-39-3	아태 지역 유럽 지역의 건강영향평가와 정책동향	최은진
연구 2011-39-4	건강영향평가 DB 구축	김동진
연구 2011-40-1	기후변화 관련 건강문제 적응대책에 대한 평가체계 개발	김남순
연구 2011-40-2	기후변화에 따른 식품안전사고 위기대응방안 연구	김정선
연구 2011-41-1	아시아 국가의 사회보장제도	홍석표
연구 2011-41-2	한국 보건의료분야 공적개발원조(ODA)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홍석표

4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1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1-42	취약 위기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2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1-43	친사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일자리 확충 전략 I 이동분야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1-44-1	2011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남상호
연구 2011-44-2	2011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강신욱
연구 2011-45	2009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I)	정영호
연구 2011-46	2011년 인터넷 건강정보 게이트웨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1-47	2011년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구축 및 운영(3년차)	이연희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01	주요국의 사회보장제도(12권)	정기혜
연구 2012-02	보건의료분야 시장개방 이슈와 대응방안 연구 -한미FTA중심으로	김대중
연구 2012-03	초·중·등 고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된 식품(안전) 내용에 관한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김정선
연구 2012-04	식품안전분야 연구개발사업 효율화 방안에 관한 연구	곽노성
연구 2012-05	근거중심보건의료에 대한 정책분석과 개선방안	김남순
연구 2012-06	약제비 지출의 목표관리를 위한 예산제의 국가별 비교 연구	박설비아
연구 2012-07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윤강재
연구 2012-08	건강형평성 강화를 위한 의료서비스 전달체계 개선방안	신호성
연구 2012-09	건강증진서비스 전달체계 다원화 방안 연구	이상영
연구 2012-10	다문화가족 여성과 아동의 건강실태 및 건강서비스 지원방안 연구	김혜련
연구 2012-11	농어촌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지역사회 지원 조직화 방안	김동진
연구 2012-12	정신건강고위험자 관리체계 정립방안에 관한 연구	정진욱
연구 2012-13	식품안전분야 인식조사 개선을 위한 조사시스템 구축방안	정기혜
연구 2012-14	보건의료체계의 New Paradigm 구축 연구	신영석
연구 2012-15	보험자 내부경쟁을 통한 효율화 방안 연구	김진수
연구 2012-16	국민연금 적정부담 수준에 관한 연구	윤석명
연구 2012-17	건강보험 노인의료비의 효율적 관리방안	신현웅
연구 2012-18	장애인소득보장제도간 급여의 형평성 제고방안 연구	신화연
연구 2012-19	사회정책목표의 실질적 달성을 위한 중장기 복지재정 운용방향	유근춘
연구 2012-20	사회환경에 따른 복지지출 수요와 경제주체별 재정부담능력에 관한 연구	원종욱
연구 2012-21	복지지출 수준에 따른 사회현상과 정책과제	고경환
연구 2012-22	중앙과 지방의 사회복지 재원분담	최성은
연구 2012-23	지방정부의 복지재정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지방정부의 복지수준과 욕구의 대응성 분석	고경환
연구 2012-24	2012년 사회예산 분석	최성은
연구 2012-25	2012 보건복지재정의 정책과제	유근춘
연구 2012-26	공무원연금 등 직역연금 재정평가와 정책현안 분석: 군인연금과 노르딕 모델을 중심으로	윤석명·신화연
연구 2012-27	OECD 국가의 사회복지지출과 재정건전성 비교연구	원종욱
연구 2012-28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저소득층 소득지원제도 발전방향	강신욱
연구 2012-29	청년층 근로빈곤 실태 및 지원방안 연구	김태완
연구 2012-30	중고령자의 소득·자산분포와 노후빈곤가능성 분석	남상호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31	현세대 노인의 빈곤 실태 및 소득보장 방안 연구	김미곤
연구 2012-32	빈곤에 대한 대안적 접근: 욕구범주를 고려한 다차원성에 대한 분석	이현주
연구 2012-33	빈곤층 라이프스타일 분석 및 복합적 커뮤니티 케어 제공방안 연구	염주희
연구 2012-34	사회정책과 사회통합의 국가비교: 아시아 국가를 중심으로 1 (터키)	이현주
연구 2012-35	인구구조변화가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김문길
연구 2012-36	한국복지패널 연계 질적연구(2차): 빈곤층의 삶과 탈빈곤 노력을 중심으로	김미곤
연구 2012-37	2012년 빈곤통계연보	김문길
연구 2012-38	사회서비스 바우처사업의 정책효과 분석 연구	강혜규
연구 2012-39	아동복지지출실태 및 적정 아동복지지출 규모 추계	김미숙
연구 2012-40	수요자 중심 장애인복지정책 개발을 위한 연구: 2011년 장애인 실태조사 심층분석	김성희
연구 2012-41	다문화가족의 변화와 사회적 대응방안 연구	김유경
연구 2012-42	장애인의 소득보장과 사회서비스 연계동향 및 정책과제	박수지
연구 2012-43	보건복지부문의 소셜미디어 활용 현황 및 정책과제	정영철
연구 2012-44	한국의 보건복지 동향 2012	장영식
연구 2012-45	의료이용 통계생산 개선에 관한 연구	도세록
연구 2012-46	보건복지분야 조사통계 선진화 방안 연구	손창균
연구 2012-47-1	미래 성장을 위한 저출산부문의 국가책임 강화 방안	이삼식
연구 2012-47-2	국가 사회 정책으로서 통합적인 저출산 정책 추진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	중앙정부와지방정부의저출산정책연계방안	이상립
연구 2012-47-4	여성근로자의 노동조건에 따른 출산수준 차이와 정책방안	김현식
연구 2012-47-5	친가족기업 지표개발과 적용방안: 가족친화인증제도의 성과점검과 향후과제	이철선
연구 2012-47-6	한국사회 결혼규범이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 분석: 다출산 가정을 중심으로	염주희
연구 2012-47-7	주거행태와 결혼·출산 간 연관성 분석	이삼식
연구 2012-47-8	임신 및 출산을 위한 안락수정 사술비 지불보상 현황과 정책방향	황나미
연구 2012-47-9	신생아기 저출생체중아 사망영향요인과 관리방안	최정수
연구 2012-47-10	둘째자녀 출산제약 요인분석과 정책방안	정은희
연구 2012-47-11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유산상속 동기변화 전망과 정책과제	김현식
연구 2012-47-12	고령화·저출산에 따른 지역별 인구분포와 변화요인 분석과 정책과제	(이현창)
연구 2012-47-13	남북한 통합시 인구이동 전망과 대응과제	이상립
연구 2012-47-14	2011년도 노인실태조사 심층분석	정경희
연구 2012-47-15	100세 시대 건강한 노화의 양상과 정책과제 - M시 종적연구(II)	오영희
연구 2012-47-16	노인 장기요양서비스 전달체계의 평가 및 개선방안: 재가서비스를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17	노인장기요양 욕구필요도 측정방식 개발	이윤경
연구 2012-47-18	고령화에 관한 마드리드 국제행동계획(MIPAA) 이행실태 및 평가	정경희
연구 2012-47-19	복지용구사업 시장규모 추계와 활성화 방안	김대중
연구 2012-47-20	저출산 현상의 동태적 분석을 위한 지역 사례 조사	박종서
연구 2012-47-21	100세 시대 대응 고령화 지역 연구	이윤경
연구 2012-47-22	저출산대책 관련 국제동향분석: 미국·영국 편	이삼식
연구 2012-47-23	선진국의 고령사회정책 유럽국가의 활기찬고령화(active ageing)정책을 중심으로	선우덕
연구 2012-47-24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국민인식 연구(II)	오영희

6 • 간행물위원회 안내 및 발간목록

발간번호	2012년도 보고서명	연구책임자
연구 2012-47-25	가족구조 변화와 정책적 함의: 1인가구 증가와 생활실태를 중심으로	정경희
연구 2012-47-26	출산력시계열자료 구축 및 분석	신창우·이삼식
연구 2012-47-27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사회복지 공적전달체계 개편 방안	정홍원
연구 2012-47-28	부모에 대한 경제적 의존과 자녀의 만혼화	(이만우)
연구 2012-47-29	저출산에 대응한 영유아 보육·교육 정책 방안	신윤정
연구 2012-47-30	농업인 노후준비 실태와 정책대안	(최경환)
연구 2012-47-31	저출산 고령화 대응 영세자영업자 생활실태 연구	박중서
연구 2012-48	보건의료자원배분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모니터링시스템 구축 및 운영	오영호
연구 2012-49-1	중앙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이상영
연구 2012-49-2	지방자치단체환경보건정책에 대한 건강영향평가	김동진
연구 2012-49-3	이태지역 및 유림지역의 건강영향평가 동향 및 정책과제	최은진
연구 2012-49-4	건강증진서비스이용에 대한 개인의 사회적 자본의 영향 연구	최은진
연구 2012-50-1	지역사회 기후변화 관련 건강적응대책 발진방안	김남순
연구 2012-50-2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개선 방안	김정선
연구 2012-51	아시아 국가의 사회정책 비교연구: 빈곤정책	홍석표
연구 2012-52	취약·위기가족 및 다문화가족의 예방맞춤형 복지체계 구축 및 통합사례 관리 연구 (3차년도)	김승권
연구 2012-53	친서민정책으로서의 사회서비스 알자리확충 전략II: 영유아돌봄 및 초등 방과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미숙
연구 2012-54	2012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	김승권
연구 2012-55-1	2012년 한국복지패널 기초분석 보고서	최현수
연구 2012-55-2	2012년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통해 본 한국의 사회지표	남상호
연구 2012-56-1	2012년 한국의료패널 기초분석보고서(I)	정영호
연구 2012-56-2	2012년 한국의료패널을 활용한 의료이용 심층연구	김대중
연구 2012-57	2012년 인터넷 건강정보평가시스템 구축 및 운영	송태민
연구 2012-58	보건복지통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4년차)	이연희
연구 2012-59	의료분쟁조정중재제도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와 대책	이상영
연구 2012-60	북한주민의 생활과 보건복지실태	황나미
연구 2012-61	사회보장 재정주계 방법론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	원종욱
연구 2012-62	미래 보건복지 방향설정과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신영석
연구 2012-63	보건의료 분야 법령 현황과 주요 과제	윤강재
연구 2012-64	우리나라의 자살급증원인과 자살예방을 위한 정책과제	이상영
연구 2012-65	복지정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재정정책 - 스웨덴, 프랑스, 영국을 중심으로 -	고경환
연구 2012-66	OECD 보건통계로 본 한국의 보건의료 위상과 성과 및 함의	김혜련
연구 2012-67	보건복지 종합지수 연구	남상호
연구 2012-68	2012년 지역복지개발평가센터 운영보고서	김승권
협동 2012-1	2012년 사회보건분야 기후변화 취약성 평가 및 적응역량 강화	신호성
협동 2012-2	2012년 비영리법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오영호